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일보 공동주최 세미나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전라북도 일자리 문제와 대응방안 –

2010. 6

전북발전연구원 · 전북일보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미나 개최

◆ 본 토론회를 통해 전라북도의 **농촌, 청년,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과 사회적기업의 육성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 주　　제 : **전라북도 일자리 문제와 대응방안**

▢ 일　　정 : 2010년 **6**월 **8**일(화) **14:00 ~ 16:35**

▢ 장　　소 : 전북도청 **중회의실** (3층)

▢ 참 석 자 : **도내·외 전문가** (발제자, 토론자), **도관계자** (전북도청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과, 노인정책과, 농업농촌과),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일보**

▢ 발제 및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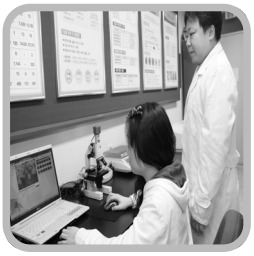
Ⅱ 주요내용

▢ **내용**

- 사회적일자리 사업 개선방안
-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청년 고용시장의 특징과 일자리 창출방안
-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기회

Ⅲ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14:10 (10`)	**개회**	**개회, 상견례**
14:10-15:30 (80`)	**주제 발표**	주제발표 1 : **이 강 진** (전북발전연구원) 제목: **전북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주제발표 2 : **홍 성 효** (전북발전연구원) 제목: **전라북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제발표 3 : **김 성 민** (전북발전연구원) 제목: **전라북도 청년 노동시장의 특징과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주제발표 4 : **이 민 수** (전북발전연구원) 제목: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기회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15:30-15:40 (10`)	**Coffee Break**	
15:40-16:20 (40`)	**종합 토론**	**좌 장: 최 원 규** (교수,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정토론: 임 상 훈** (기자, 전북일보) **최 낙 관** (교수, 예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최 창 곤** (교수, 전북대학교) **구 자 인** (팀장, 진안군청 귀농귀촌지원센터) **최 상 기** (과장, 전북도청 일자리창출과)
16:20-16:35 (15`)	**폐회**	







전북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1

이 강 진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전라북도

전북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2010년 6월 8일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강 진

목 차

1.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
2. 사회적기업의 이해
3. 전북 사회적 기업 현황
4. 전북 사회적기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1.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

▶ 1960년대, 70년대 : 급속한 사회변화

- 1인당 국민소득 700%p 상승
- 세계 경제 해마다 5%씩 성장
- 평균수명 30~40년 연장
- 교육시스템의 확대 : 문자판독률 60% 향상
- 전 세계 대학 수 2배로 증가
- 여성운동 증가 / 인종장벽 감소

▶ 지구의 지속가능성 위협

- 상층토와 숲의 파괴
- 지구온난화
- 생물 서식지 손상
- 물 부족
- AIDS 증가
- 지구자원의 고갈

▶ IT 발달

- IT기술의 발달 : 정보습득의 용의성
- 빈곤과 불평등 현장 목격 (텔레비전/인터넷)
- Venture 기업의 등장

▶ 정부 정책의 한계

- 정부는 공공정책에서 국민의 의지를 제대로 해석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 정부는 공공의 善을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아니다.
- 정부는 사회적기업 또는 시민조직 보다 오히려 비창의적인 경우가 많다.
- 정부는 강한 기업권력 앞에서 무능력하다.

사회적문제 해결 접근방법의 다양화 필요

1.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

▶ 제 4 섹터의 출현

- 제1섹터 : 정부
  제2섹터 : 민간기업
  제3섹터 : 비정부기구, 비영리기구
- 미국 각 대학에서 시민섹터 연구 과목 개설
- 시민섹터의 취업률 25% 성장
- 닷오알지(.org) 사이트의 폭발적 증가

▶ 최근 25년간 60% 이상 증가

- 인도네시아 : 2,000 여개
- 인 도 : 100만개
- 캐나다 : 20만개
- 미 국 : 200만개
- 방글라데시 : 2만개
- 슬로바키아 : 12,000개
- 브라질 : 100만개

▶ 달라지는 세계

- 2007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
  - 사회적기업가들의 대거 초청 참가
- 착한소비 대두
  - 공정무역등 소비에서의 변화
- 사회적기업가
  - 세상을 바꾸는 힘, 착한 사회를 만드는 활력소
  - 신선한 아이디어와 실천방법을 모색하는
  - 비전 추구를 위해 쉴 줄 모르는
  - 부정적인 말을 할 줄 모르는

경제 · 사회구조의 다양화는 문제해결에 접근방법의 변화 요구

사회적기업가들이 사회의 질병문제 해결의 구원투수로 등장

2. 사회적기업의 이해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2007년 7월)
-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영국DTI (2002년)
- 사회적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주주와 소유주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창출된 수익을 주로 기업자체 또는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

Defourney (2001년)

✓ **경제적 기준**
- 재화와 용역의 지속적인 생산과 제공
- 높은 수준의 자율성
-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감수
- 최소한의 유급직원

✓ **사회적 기준**
-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명백한 목표
- 시민들에 의한 자율적 시작
- 자본소유권에 의하지 않은 의사결정
-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
- 제한된 이익분배

OECD (1999년)
- **기업 전략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되 공익을 추구**
-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제적, 사회적 목적 추구
- 사회적 소외와 실업문제에 대해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든 민간활동

EMES* (1996년)
- **사회적 기업의 ① 경제적 속성, ② 사회적 속성 구분**

①
- 지속적으로 재화/서비스를 생산 판매
- 정부나 기업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유지
-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 수행
- 최소한의 유급 노동자 고용

②
-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
- 자본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 고객 등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참여
- 이윤배분을 제한적으로 하는 조직
- 지역사회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

-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 단체의 중간 형태**
- **기업과 유사한 영업활동을 통해 후원 없이도 지속적으로 활동**
- **재정적 자립 측면에서 후원금에 의존하는 NGO, 비영리 사회 단체와는 근본적 차이**

2. 사회적기업의 이해

▶유럽의 사회적 기업

유럽
-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기업 발전
- 정부차원의 활발한 제도적, 재정적 기여
- 조합원 중심의 제한적 사회적기업 이윤 배분
- 사회적경제로 기업의 공공성, 사회성 강조
- 90년대 이후 사회적기업에 관한 직접적 관계법령 제정과 지원체계 마련

다양한 형태
-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 벨기에의 사회적 목적 회사
- 포르투갈의 유한책임 사회적 협동조합
- 스페인의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 영국의 지역공동체 이익회사

FIFTEEN



✓ **2002년 12월 북런던의 작은 동네에 Fifteen 개업**
- 요리 운동가 Jamie Oliver가 15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레스토랑을 설립
- Fifteen 설립 과정은 TV에서 방송 → 'Jamie's Kitchen'

✓ **식당을 통해 이익 창출 + 청소년 교육/사활에 투자**
- 불우 청소년들에게 요리 교육을 제공하고 직업 기회 부여
- 106명의 청소년이 Fifteen에서 성공적으로 교육 후 취업, 6개의 자연주의 레스토랑 창업



2. 사회적기업의 이해

▶유럽 각국의 사회적기업 발전 정도의 유형 (전병유 외, 2003)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복지개혁 이전의 영국	●보편적 성격의 복지제도를 갖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제공과 현금급여 두가지 모두를 보장하는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델란든, 아일랜드 등	●보편적 성격의 복지제도를 갖고 있지만 현금급여에 기초하고 사회서비스의 직접 공급에 대해 정부가 제한적인 개입만을 하는 국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덜 발전 되어서 주로 현금급여에 기초하고 있고, 지역사회 보호서비스의 공적공급은 교육이나 의료같은 소수 분야에 제한

2. 사회적기업의 이해

▶미국의 사회적 기업

미국

- NGO 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회적기업 발달
- 비영리기관의 특성상 구성원에 대한 이윤의 배분 배제
- 기업의 수익 창출수단 강조
- 레이건 정부의 작은 정부론 하에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한 비영리기관의 위기 공유 의식으로,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활발한 영리활동, 정부는 간접적 제도환경 정비에 주력

다양성, 시장지향적

➢사회적기업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음
➢정부차원의 명문화된 제도적 지원 없음
➢사회적 미션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시장지향적 활동을 하는 조직
●사회적 미션: 직업훈련, 재활 프로그램, 노숙인 보호, 각종 상담 등 빈곤층을 지원하는 일

✓ **• 199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청소년 자활사업 시작**
- 사회활동가 Diane Flannery가 Ben & Jerry 후원으로 설립
- 불우 청소년에게 직업훈련과 경력개발 기회 제공
- 수익금으로는 청소년 상담, 건강관리에 재투자

✓ **• Ben & Jerry 매장 운영 + 청소년 취업 및 직업 교육**
- B&J가 무료 교육 제공 및 가맹점 프랜차이즈비 면제, 매장 입지 선정, 시장조사 같은 경영 노하우 전수
- Juma Ventures는 12년 동안 2,000여 명 고용

1960년대 이후 빈곤과의 전쟁 종료 → 정부의 비영리조직 지원 축소 → 비영리조직의 시장지향적 활동 확대 → 미국의 사회적기업 등장

2. 사회적기업의 이해

▶미국의 사회적기업 세 유형 (정선희, 2004)

사회적 목적의 비즈니스

➢기업의 영리적 수익활동과 사회적 임무가 동시에 이뤄짐
-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정규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 일반 기업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기업
- 참가자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치료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영리적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

(ex) Rubicon Program Inc

수익창출 비즈니스

➢재정조달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 임무의 직접적 영향 없음
- 비영리조직이 운영비와 프로그램 조달을 위한 수익원으로 설립한 기업
- 비영리조직과 무관하나 기업의 이익을 온전히 사회적 목적에 환원하는 영리기업

(ex) Newman's Own

영리와 비영리간 비즈니스 파트너십

➢공익연계구매 및 마케팅을 통한 비영리조직의 수익창출
- 공익연계 구매: 대기업이 하도급을 통해 독점적 시장을 보장해줌 (ex) 보잉사와 Pioneer Industries
- 공익연계 마케팅: 사회적이슈나 공익에 기업의 제품을 연결하고 비영리 조직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기부받음

2. 사회적기업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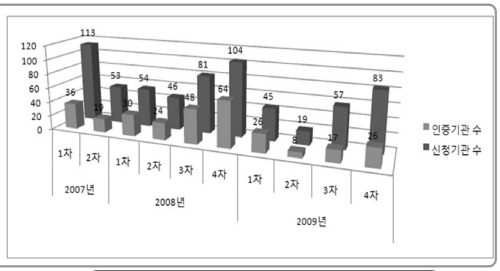
▶사회적 기업의 비교

	유럽형	미국형	한국형
제도적환경	사회적 경제	시장경제	정부주도형 시장경제
강조점	사회적 기여	수익 창출	일자리 창출
조직형태	협동조합과 협회중심	재단등 비영리기관 중심	회사와 비영리기관 중심
활동의 초점	대인 서비스	수익창출+비영리활동	비영리활동+수익창출
정부지원	조세 및 사회보험 감면	조세감면, 보조금	조세감면, 인건비 지원
이해관계자 참여	일반적 허용	제한적 인정	법적 허용
육성주도	정부, EU, 민간기업	민간재단	정부
법적 프레임워크	미약, 개선중	취약, 부족	잘 준비됨
이윤분배	제한적 인정	원칙적 배제	제한적 인정(1/3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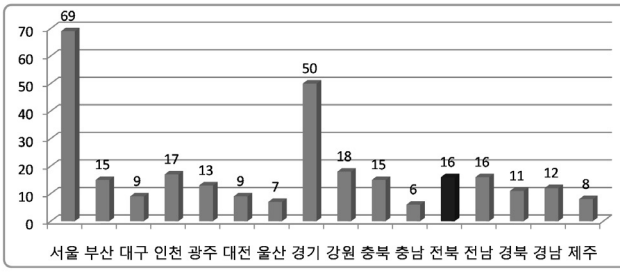
3.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

▶전국 인증 사회적기업

- 총 10차례 인증 심사 과정에
  655개 기관 신청, 298개소 인증(인증률 45%)
- 인증이 취소된 7개 기관을 제외하면
  2010년 3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291개소임***
- 2008년 기준으로(201개소 대상) 자산규모는 1159억원이며,
  매출액은 1354억원, 당기순이익 97억원임(곽선화, 2009)



▶ 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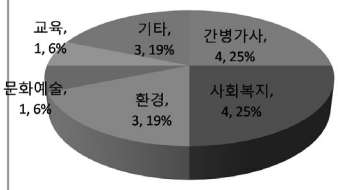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기업 분포율 46%
- 인구 및 지역 경제 규모 대비해
  전북의 사회적기업 분포율을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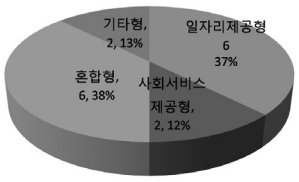
3.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

▶전북의 사회적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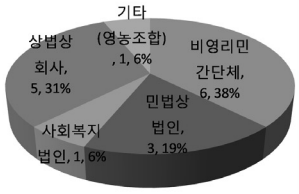
➢ 30개 기관이 인증 신청, 17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1개 기관 인증 취소로 3월 ***현재 16개소임***)



사업내용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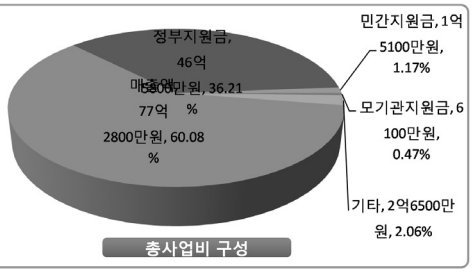


조직형태

▶전북 사회적기업의 성과(2008년 사업보고서 기준)

➢ 유급근로자 수 1,029명, 기관 평균 64명(전국 평균 47명)

➢ 총 매출액은 77억원, 당기순이익 5억 9천만원이나
영업이익은 -15억으로 영업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 2009년 3월, 14개소 기준(곽선화,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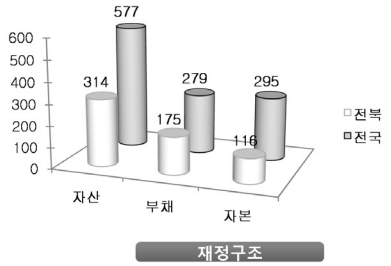
총사업비 구성

3.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

▶ 전북 사회적기업의 성과(2008년 사업보고서 기준

➢ 재정적으로 열악한 전북의 사회적 기업 현황을 볼 수 있음
(전국 평균 대비 자산은 54%, 자본은 39%) 수준

➢ 매출액 관련 비율도 전국 평균에 미달
- •인당 인건비(전국 9.5, 전북 7.5)
- •인당 매출액(전국 14.8, 전북 9.6)
- •매출액/인건비(전국 155.7, 전북 128.2)
- •인건비/매출액(전국 64.2, 전북 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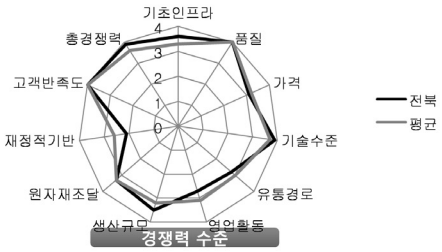


재정구조

▶전북 사회적기업의 성과(2008년 사업보고서 기준)

➢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수준은 평균 상회

➢ 기초 인프라부문, 기술수준, 생산규모는 강점,
재정적기반, 영업활동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경쟁력 수준

4. 전북 사회적기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1 시장중심 체제로 점차 전환

➢ **초기의 정부모델에서 벗어나 2단계의 양적 팽창과 질적인 도약을 위해 시장주도형 모델로 점차 전환**

• 정부주도형 모델은 재정사업으로 한계가 있음(영국의 경우 1년에 평균 2천개가 만들어 졌으나 한국은 10년을 지원하더라도 2천개가 넘지 못할것임,- 전라북도 또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육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형태 또한 중앙의 지원 답습 형태를 벗어나 중앙정책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 필요(전라북도는 인건비지원과 사업비 지원의 병행 형태로 추진할 것임)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의 완화와 지원제도의 개선(취약계층의 수혜율과 고용비율 점차 인하, 인건비 직접지원 항목 축소, 포괄적 목적자금 지원(사업개발비 허용), 기업지원보다는 프로젝트 지원 형태로 운영방안 고려



4. 전북 사회적기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2 단기적 정책으로 보호된 시장 마련과 판로 개척

➢ **단기적 처방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제도화,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여 이를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 특히 전주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을 마련하는 등 모범사례로 평가됨

➢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여건이 열악하므로 단기적으로 우선구매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하나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 시장을 육성하는데 이 제도가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

사례1 **사람과 환경**

전주시로부터 폐기물 재활용 관련업무 수탁(자립에 큰 영향 미침)

전주시 자원순환포럼을 통해 재활용 기술 전수 및 전문정보 제공

동종 업종의 사회적기업 창업의욕 저해

타 단체와의 경쟁심화로 인한 물량확보의 한계

사례2 **전통문화사랑모임**

- 업무위탁 : 전주시로부터 전통주 박물관 및 한옥체험관을 수탁하여 운영 중임

4. 전북 사회적기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3 사회적기업 지원시스템 강화

- 민간사회적기업 지원기능을 가진 기관의 역량을 강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시스템 구축(인적 물적 시스템 구축)
- 사회적기업이 경영적 자원에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프로보노(전문성 기부자)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연계된 지속적인 자문 서비스가 가능함

지원기관 역량강화

a)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전문인력 확보
b) 민관 지원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c) NGO, 예비사회적사업가 등 활동 지원
d) 시민사회의 참여 활성화(프로보노등)

Business Link •정부 및 유관기관의 경영적 자원의 일부를 사회적 기업에 연계 (영국)

REDF SEA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사회적기업과 연계(미국)

4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

- 사회적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의 육성과 사회적기업 투자펀드(Social Enterprise Fund)의 설립 – 사회적 기업의 지원 졸업 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금융시장의 접근성 확보)

영국의 Futurebuilders 대출(loan) + 실적 연계투자(Performance-related investment) + 보조금((grant) + 자문을 통한 역량 강화로 구성된 투자 패키지를 운영함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소규모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개발을 돕고 지역고용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CDFIs(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등이 대표적임

4. 전북 사회적기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사회적기업 시장의 확대

➢ 사회적기업을 보호하는 지원정책과 수요 확대정책 병행

•공공부문 조달의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비율 제도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민관 캠페인, 사회적기업 박람회)

•지역특화형(농촌형)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전통문화 중심의 사회적기업 발굴, 확산

➢ ISO26000의 대비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수용태세 확보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a) 인건비 지원
b) 우선구매 제도
c) 사업개발비 지원
d) 경영지원

수요확대정책

a) 사회적기업 인식 제고 홍보
b)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유도 (ISO26000)
c) 공공기관 구매비율 제도화
d) 사회적기업 틈새품목 발굴(서비스분야의 개발 연구)

6 사회적기업가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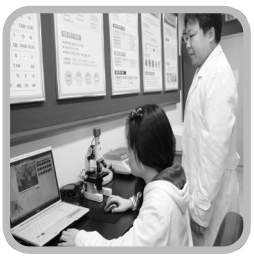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의 전문적운영을 위한 전문경영인의 육성

➢사회적기업가의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한 NGO, 사회단체의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적기업가 육성지원

a) 사회적기업가 육성 위한 MBA 정규과정 개설
b)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컨설팅 지원
c)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사회적기업 설립
d) 사회적 아카데미 및 사회적기업관련 연구회 활성화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홍 성 효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

– 김영철 · 이민환(2006)

취약계층

취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그리고 장애인

발표목차

- ○ 취약계층의 현황
- ○ 일자리 창출사업 내용
-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쟁점과 개선방향

취약계층의 현황

1. 노인

○ 도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277,682명(2009년 기준)으로 전라북도 총 인구(185만여명)에서 14.97%를 차지

○ 반면 이들 가운데 39.2%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고용률 역시 39.1%에 그침

<전라북도 내 고령인구비율>

단위 :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율	10.67	11.29	11.71	12.41	12.87	13.40	14.21	14.69

자료 : 전라북도 도정현황통계시스템

○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지속으로 노년부양비(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는 2000년 10.1%에서 2010년 15.0%, 2020년 21.7%로 증가

○ 2008년 기준, 고령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7.6%인 반면, 불과 25.0%만이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에 해당

○ 고령자 인구비율의 증가, 노후에 대한 불충분한 대비는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

2. 여성

○ 전라북도 여성 가운데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25-64세의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전라북도 여성 가운데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비율>

단위 : %

구분	1995	2000	2005
25-29세	30.94	42.49	62.31
30-34세	23.43	32.19	46.40
35-39세	10.73	22.62	33.04
40-44세	6.62	11.36	21.46
45-49세	3.28	7.11	11.59
50-54세	1.32	3.58	5.91
55-59세	0.77	1.83	2.62
60-64세	0.82	1.32	1.5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는 50%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녀간 차이는 23.5%p (2008년)로 여전히 큼

○ 최근에 초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출산과 육아에 의한 경력 단절현상이 30대 여성에게서 나타남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구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 이상
1995	14.5	66.1	47.9	47.6	59.2	65.7	60.6	58.8	54.1	28.7
1998	11.9	61.1	51.5	47.5	58.6	63.6	61.5	55.3	51.4	27.9
2000	12.6	61.2	55.9	48.8	59.3	63.8	64.9	55.3	51.3	30.2
2005	10.3	62.6	66.1	50.2	59.0	65.6	63.1	58.3	49.1	28.1
2007	8.1	56.4	68.2	53.7	58.6	66.6	65.0	59.3	50.6	28.7
2008	7.5	54.6	69.3	53.3	58.5	65.9	65.8	60.3	52.5	27.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 년도

○ 여성의 평균학력 증가는 여성의 실업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

3. 장애인

○ 전북에는 129,753명(전북 인구의 7.0%)의 장애인이 거주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56.4%), 청각장애(10.1%), 뇌병변장애(10.0%), 시각장애(9.1%) 등의 순으로 높음

- 등급별로는 1등급이 10,650명(8.2%), 2등급이 19,675명(15.2%), 3등급이 23,453명(18.1%)으로 조사되며, 38,068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으로 전라북도 전체 장애인 가운데 29% 이상을 차지

○ 전라북도 소재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5.8%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89%(2008년 기준)

○ 장애인의 의무고용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고용률은 1.73%이며 부문별로는 공공기관에서의 고용률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에서의 고용률이 1.70%로 가장 낮음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대상업체수	상시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전체	22,106	6,035,950	111,043	104,132	1.73
정부부문	79	824,164	16,526	14,468	1.76
민간부문	22,027	5,211,786	94,517	89,664	1.72
공공기관	253	288,225	5,645	5,899	2.05
민간기업	21,774	4,923,561	88,872	83,765	1.70

자료 : 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09

주 : 1) 대상사업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고용의무의 주체단위를 말함
2) 2006년부터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고용률이 산출되었음
3) 2008년 12월 말 기준임

○ 장애인 고용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

전라북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 현황

1. 노인

<2010년도 전라북도 고령자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사업명	수행 기관수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노인일자리	106	13,000	18,919	9,460	3,784	5,675
시장형 초기 투자사업	1	10	150	75	23	52
노인회 사회적일자리	15	333	132		132	
노인일자리추진본부 운영	1	상담(1,222) 알선(627) 취업(284) 교육(6,000)	120		120	
노-노케어 전문가양성교육	1	700	50		50	
시니어클럽운영	9	290	1,620		243	1,377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7	190	-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2010년도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사업유형	일자리	예산	주요사업	기간	근무시간	예산지원기준
공익형	5,930	8,925	환경개선, 학교주변 교통정리, 행정지원, 시설관리지원 사업	7개월 이내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	인건비 월/20만원, 부대경비 년/11만원
교육형	2,372	3,570	학습지도 강사, 여가활용 강사, 전문해설사	7개월 이내	월 20시간 이내	인건비 월/20만원, 부대경비 년/15만원
복지형	3,558	5,355	거동불편자 보호, 시설이용자 돌봄, 소외계층 지원, 주거개선 사업, 아동청소년보호, 문화복지 사업	7개월 이내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	인건비 월/20만원, 부대경비 년/15만원
인력 파견형	360	55	시험감독관, 주례사, 주유원, 경비원, 청소 파견사업 등	수요처 계약 기간	수요처 기준	1인당 년/15만원이내
소득창출	780	1,014	제조 및 유통사업, 서비스업, 영농업, 기타 특화사업 등	연중 참여 원칙	자체운영규정	참여자 1인당 연간 130만원 범위 내 ・인건비 : 정부보조금은 월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사업비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교육비, 장비비 및 여비 등의 직접 경비로 사용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2. 여성

<2010년도 전라북도 여성 일자리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7개 분야, 9개 사업			4,341	1,649	2,236	453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새일센터 운영지원	사 업 량 : 5개소 지원방법 : 프로그램별 지원 사업내용 : 교육훈련, 주부인턴제, 취업 설계사운영, 일과가정양립복지지원	1,522	1,117	326	78
	새일본부 운영지원	선정 : '08. 8월 여성부공모 선정 인원 : 12명(본부직원7, 설계사5) 내용 :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 사업 : 상담, 교육,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여성취업 종합지원	641	396	91	153
	시·군 취업설계사	14시군 취업설계사 19명	273	136	68	68
인터넷쇼핑몰 창업스튜디오 지원		대 상 : 6개소(새일센터 5, 새일본부 1) 지원액 : 센터별 5백만원 내 용 : 교육생 작품판매를 통한 인터넷 창업지원	30		30	
맞춤형 직업훈련	여성친화적 직업훈련 사업	대 상 : 경력단절여성 210명 교육과정 : 5개 과정 210여명 교육운영 : 12주정도(주 3일, 1일 4시간) 이론 및 실습 추진방법 : 전문기관 위탁	200		200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대 상 : 고학력 여성대상 120명 교육기관 : 전문기관 위탁 교육과정 : 5개직종 120여명 추진방법 : 교육과정 및 추진기관 공모통한 위탁교육	100		100	
인력개발센터 (지방이양)		인력개발센터 : 2개소 (전주, 군산) 지원기준 : 1개소 당 260백만원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 사업내용 : 취업정보, 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취미, 교양, 사회교육	520		520	
교육문화센터 운영지원		취업정보팀 설치 : '07. 3. 15 운영인원 : 3명 설치기관 :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주요역할 : 구인-구직 및 취업정보 구심체 수행, 친여성업체 발굴, 취업정보 DB구축, 취업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835		835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사업대상 : 11개 시군 경력단절여성 교육기관 : 여성회관 및 사회복지관등 추진방법 : 시군 지역특화 산업 등에 여성인력 수요조사 등 취업처 확보 후 맞춤형 교육 실시 직접취업연계	220		66	154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3. 장애인

<전라북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유형	사업	일자리	예산	주요 사업내용	참여 기간	예산지원기준
공공 일자리	복지 일자리	350	392	건강도우미, 보호시설 케어 도우미, 중증장애인 등하교 지도, 관공서 청소, 보육시설 도우미,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환경도우미, 주차 단속보조 등	7개월 이내	인건비 20만원/월, 부대경비 11.4만원
	주민자치 센터 도우미	150	2,086	읍면동 장애인 복지업무 보조	12개월 이내	인건비 85.5만원/월, 퇴직적립금 별도
민간 일자리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50	1,158 (국비 54%)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신축 및 장비보강, 기린작업활동시설(온실) 건립		
	중증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시범사업	100	2,000 (국비 50%)	떡가공사업, 기능성 농산물 사업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계 사업	50	-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정산원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개선방향

1. 쟁점 및 개선방향

1) 열악한 수익성과 한정된 예산에 대한 의존성 심화로 사업의 지속성이 낮음

► 중앙정부차원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 일환으로 복지형 일자리에 의한 공익형 일자리의 대체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 전북의 경우 시장형이나 창업모델형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특히 군단위에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같은 사업모델을 활성화시켜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꾀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마케팅이나 회계 등의 전문적인 경영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의 제공이 필요

►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속성상 예산에 대한 의존성은 일정부분 용인될 수밖에 없음

2)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으로 인해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

►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40~45시간/월 근로에 대한 대가는 20만원으로 전일제 일자리와 월평균 50~100만원의 임금에 대한 선호가 대다수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임금 현실화가 요구

► 전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가운데 시장형-전주효자시니어클럽의 '엄마손 찐빵'-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때문

3) 기존 시장과의 충돌로 인해 민간에 의한 일자리를 사회적 일자리가 구축(crowd-out)

► 일부 시장형이나 창업모델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건물 청소나 밑반찬 가게운영-의 경우 기존 시장과의 충돌로 인해 민간에 의한 정상적인 일자리가 사회적 일자리로 대체되는 모순이 발생하며, 이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에도 어긋남

4) 장애인을 위한 경과성 일자리로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노력과 제도에 대한 인지부족의 문제

► 장애인에게 있어 사회적 일자리는 최종목표가 아닌 민간부문에서의 취업을 위한 경과성 일자리로서 장애인에게 알맞은 직무의 계발과 이들의 업무에 대한 경험축척의 방편이 되어야 함. 노동부 설문(2006)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부족(39.6%)으로 조사됨

►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의무고용과 많은 장려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부족이 정책의 낮은 효과성에 기여

2. 사업 예시

1) 노인

사업명	**전통혼례 및 민속놀이 재현**
사업내용	전주 한옥마을이나 국공립공원과 같이 관광객이 많거나 초중등학생들이 견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전통혼례나 민속놀이 등을 재현
운영	2010년 4월 - 10월, 주말 혹은 격일
지원	임금 일부
기타	· 전통의식의 재현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생들에게 선조의 생활상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교육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 · 예산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행사 당일 입장료를 징수하되,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장료 책정

사업명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사업내용	도내 도심지역에 위치한 각 초등학교에 소규모로 채소를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여 초등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운영	연중
지원	학습장 조성
기타	도내 6개 시에 281개의 초등학교가 존재하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사업의 확대시행을 통해 일자리창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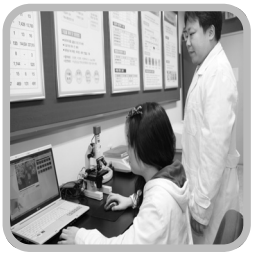
사업명	**재래시장 택배사업**
사업내용	재래시장에서 택배서비스를 제공
운영	연중
지원	임금 일부
기타	· 전주시 보조사업으로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참여 인원: 2인, 평균이용횟수: 10회/일, 이용금액: 일반 택배요금의 70-80% 수준), 이를 도내 모든 재래시장으로 확대함으로써 노인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 효과 기대 · 사업의 예산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운영비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토록 함

2) 여성

사업명	**야학교사 파견**
사업내용	도내 야간학교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선생님으로 파견
운영	연중(주 2-3일 근무)
지원	임금
기타	· 도내에는 약 16개의 야학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주 5일 수업에 한글반, 중등반, 고등반, 기타반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학생수는 30-80명 수준 · 교사는 일반 직장인이나 방학기간 중 대학생들의 자원봉사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며 안정적이지 못함(실제로 익산시 소재한 야학의 경우 교사가 없어 곧 폐교해야 할 형편)

3) 장애인

사업명	**기업연계 서비스업(세탁) 운영**
사업내용	도내 대기업과 연계하여, 현장직원들의 근무복, 목욕탕 수건 등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사업장 운영
운영	연중
지원	초기 시설비
기타	· 포스코는 세탁, 사무지원, IT · 통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인 포스위드를 설립 ·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총인원의 48%인 122명)을 지원 ·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회사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하는 방편이 될 수 있으며, 1명의 중증장애인 고용시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됨







전라북도 청년 노동시장의 특징과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3

김 성 민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북도 청년 노동시장의 특징과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전북발전연구원 김성민

↦ 1

목차

1. 전라북도 청년 노동시장의 특징

2.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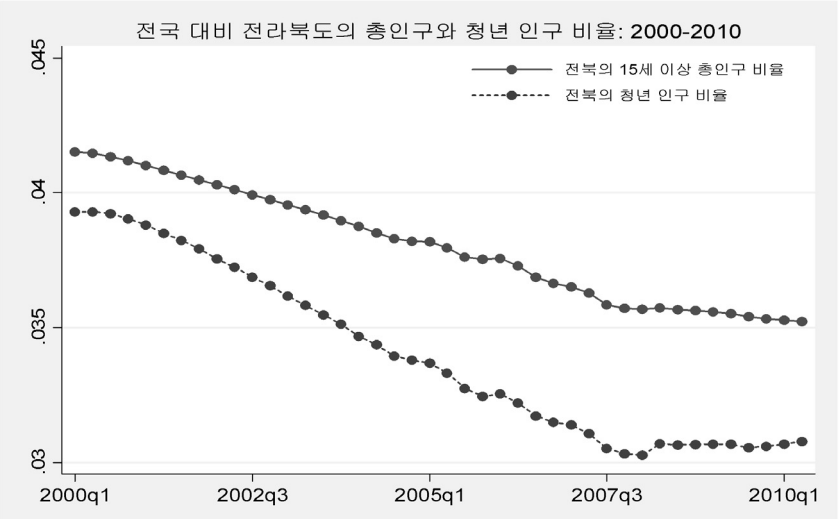
↦ 2

1. 전라북도 청년 노동시장의 특징

- 전라북도 청년 노동시장 현황
- 전라북도 청년들의 졸업 현황
- 중소기업 인원 부족률 현황
-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직업선호도 설문조사
- 중소기업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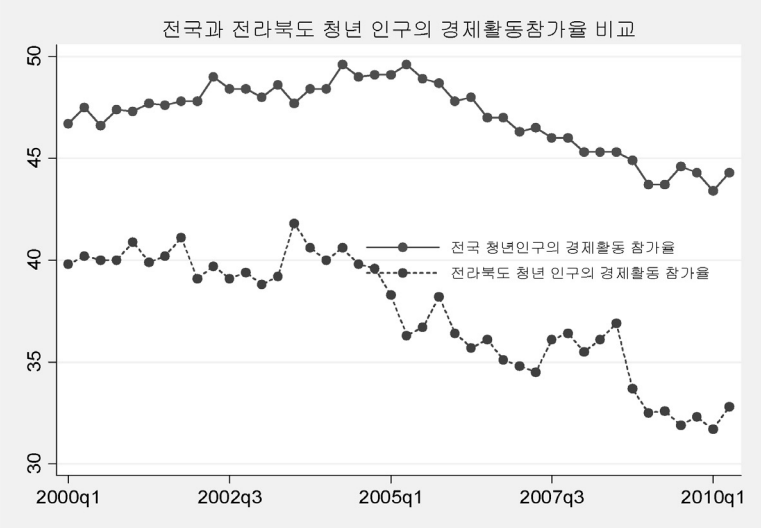
↦ 3

전라북도 청년 노동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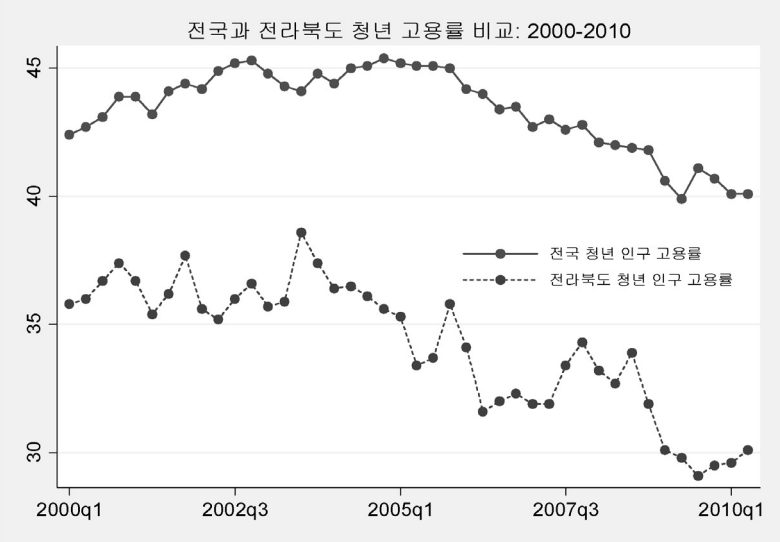
↦ 4

전라북도 청년 노동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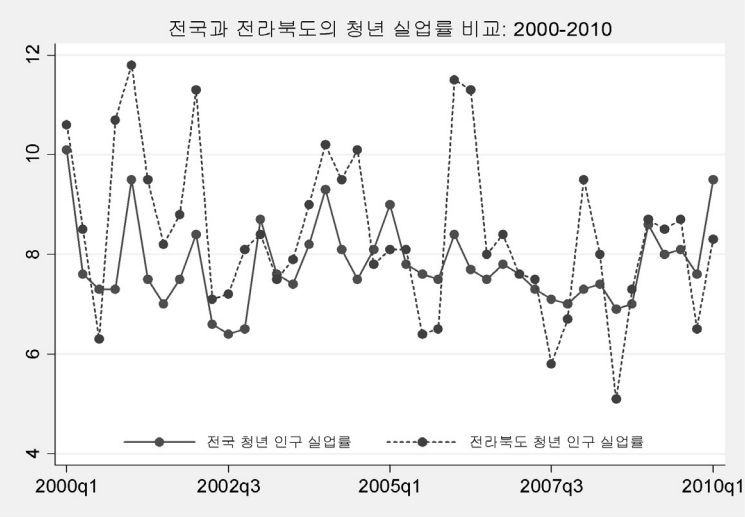
↦ 5

전라북도 청년 노동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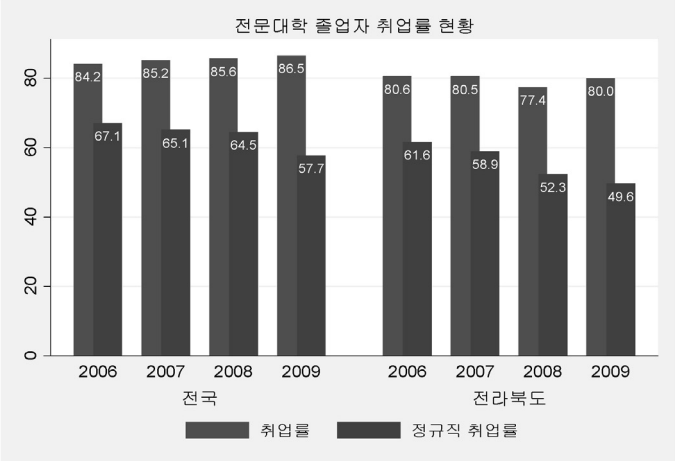
↦ 6

전라북도 청년 노동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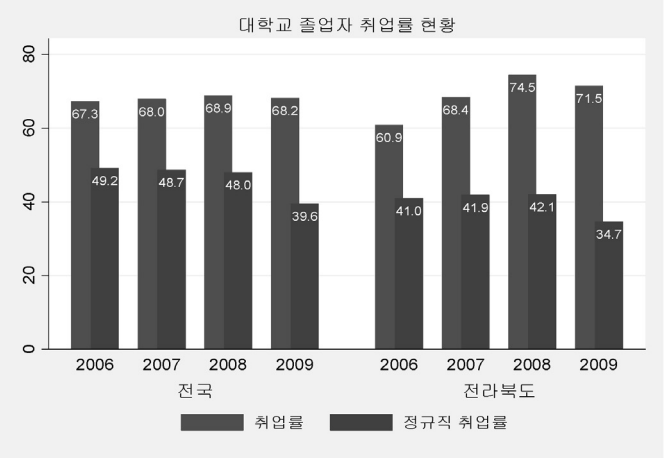
↦ 7

전라북도 청년 졸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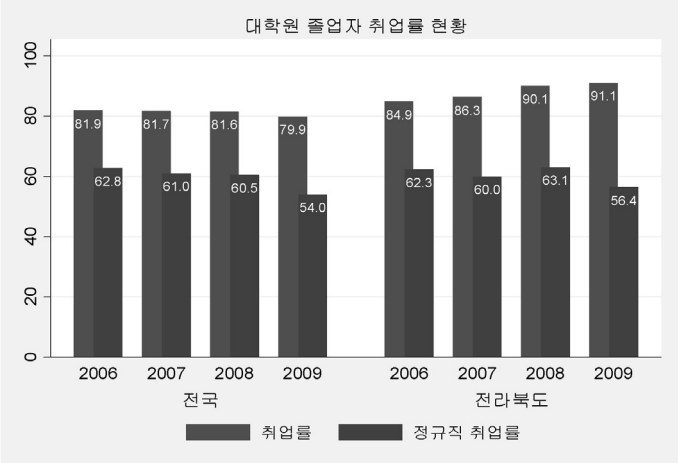
↦ 8

전라북도 청년 졸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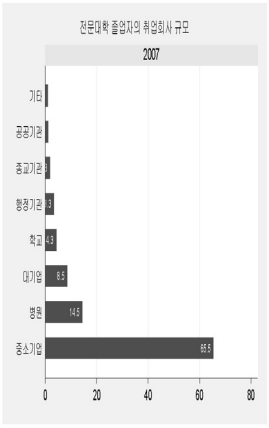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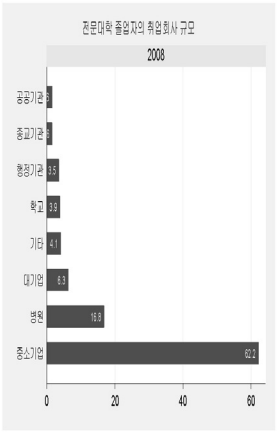
전라북도 청년 졸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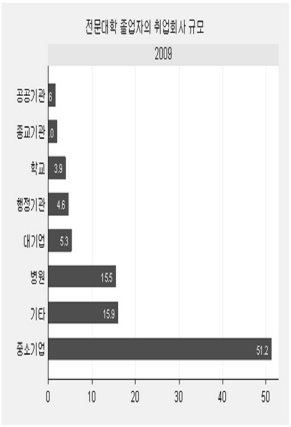


↦ 10

전라북도 청년 졸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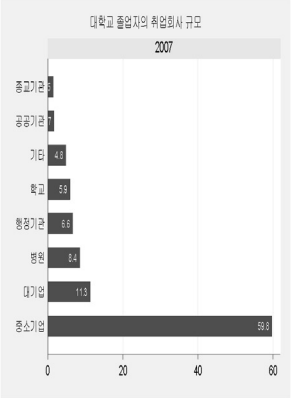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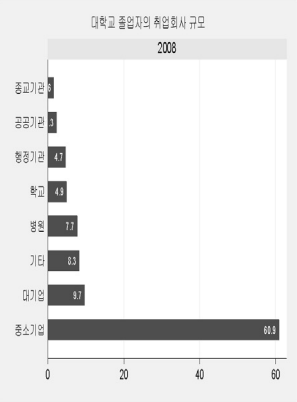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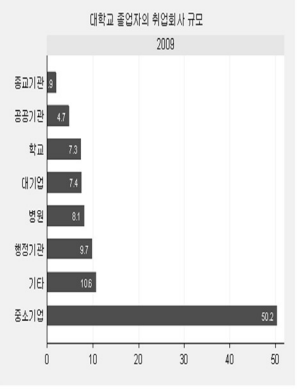


↦ 11

전라북도 청년 졸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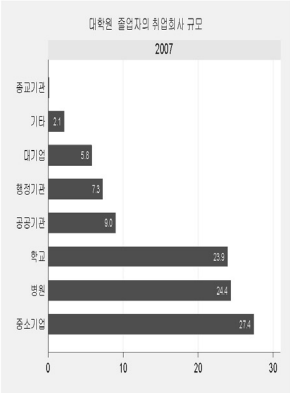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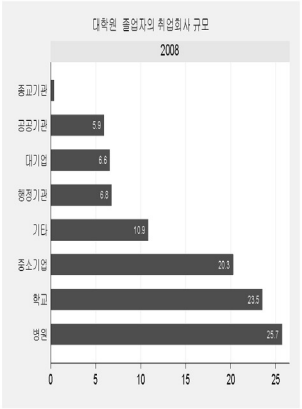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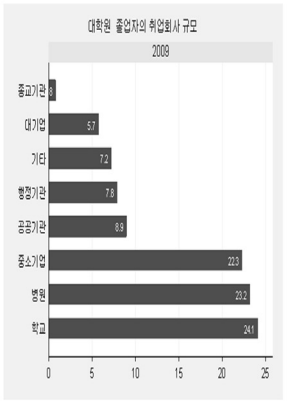


↦ 12

전라북도 청년 졸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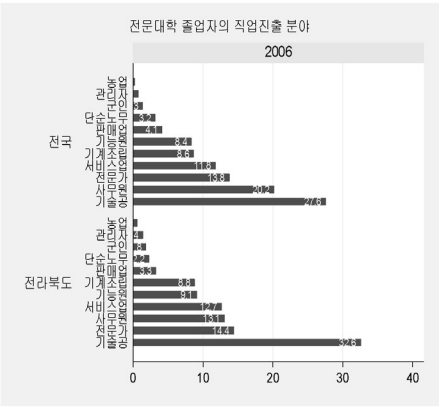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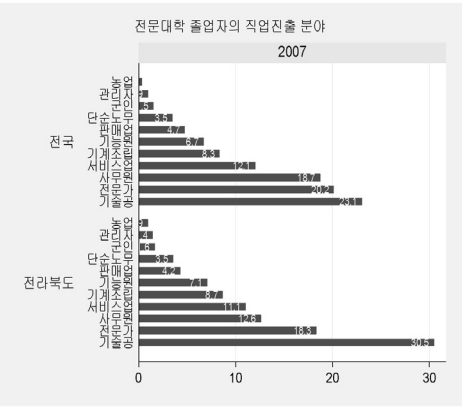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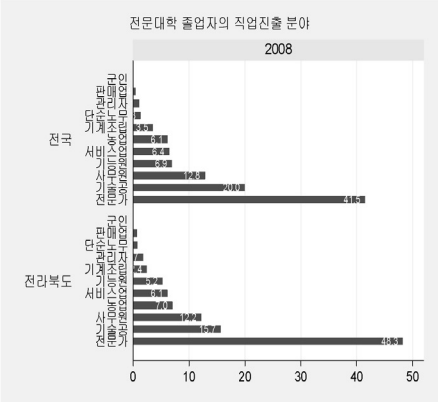
전라북도 청년 졸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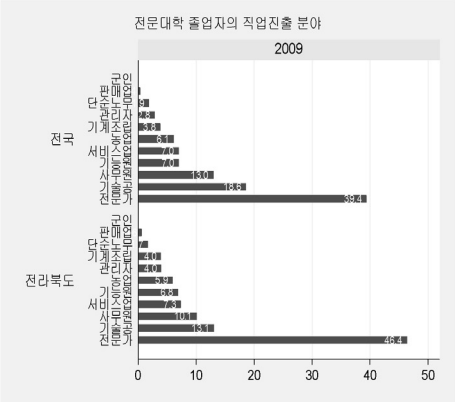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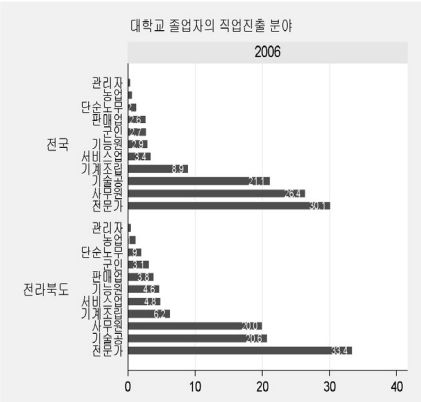
전라북도 청년 졸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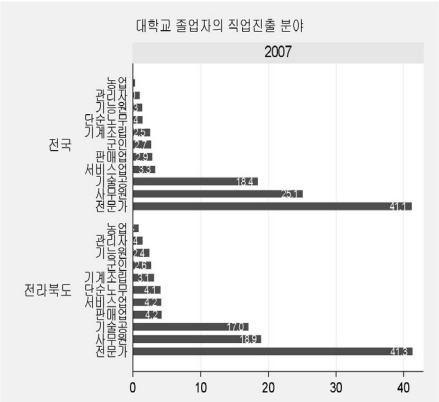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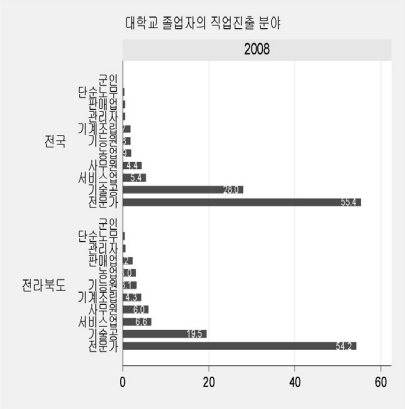
전라북도 청년 졸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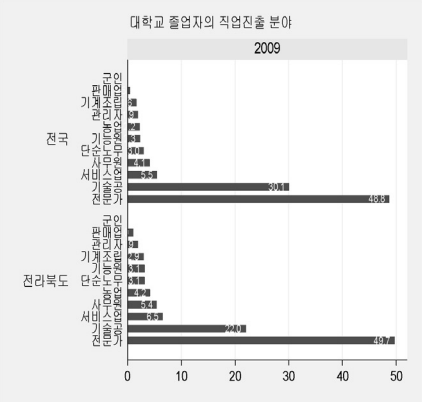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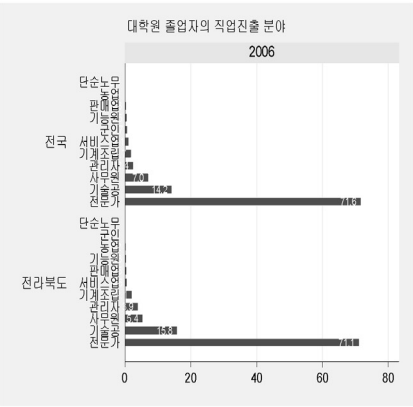
전라북도 청년 졸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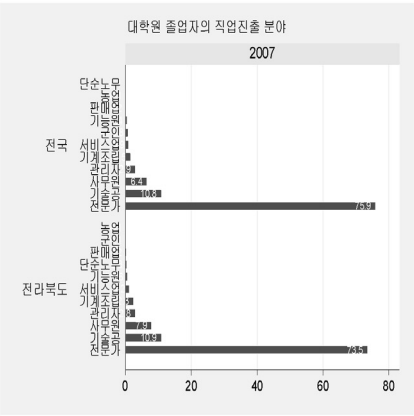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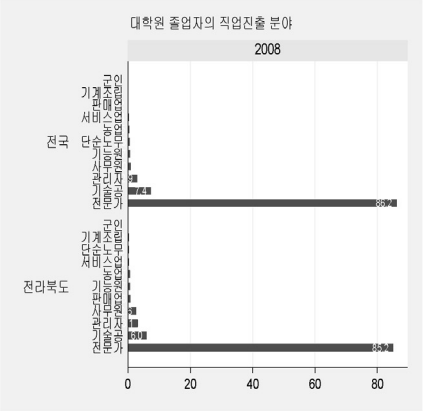
전라북도 청년 졸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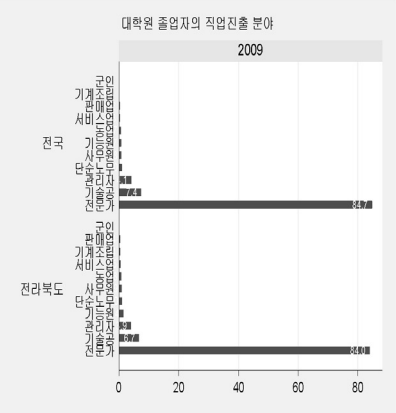




↦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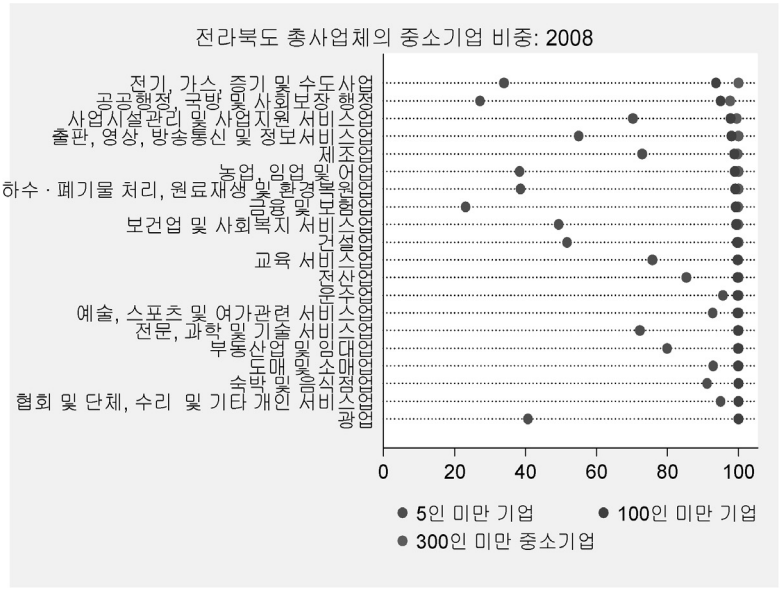
전라북도 청년 졸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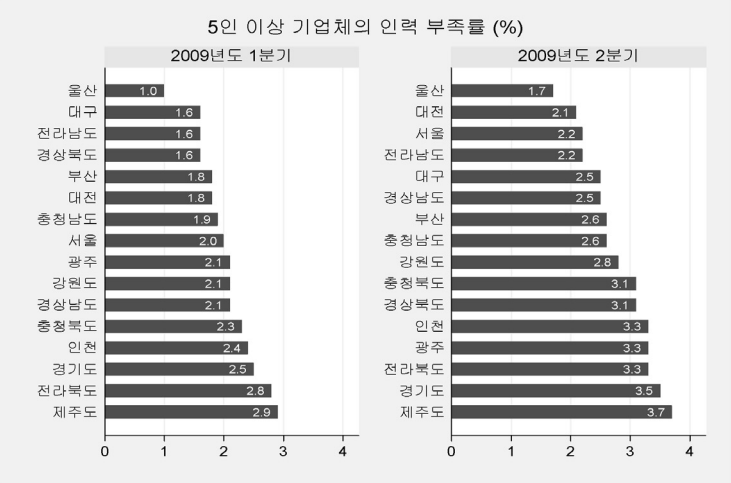
↦ 19

전라북도 중소기업 인원 부족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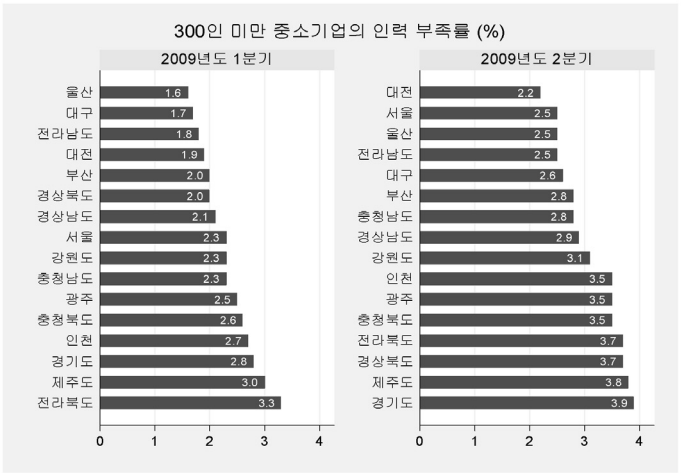
↦ 20

전라북도 중소기업 인원 부족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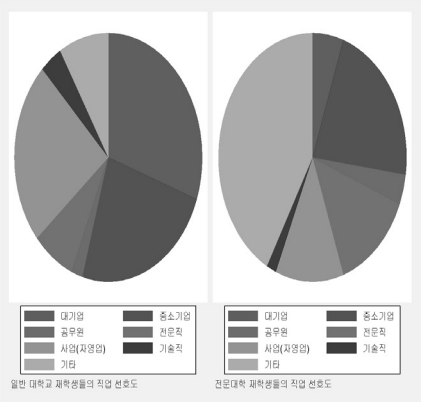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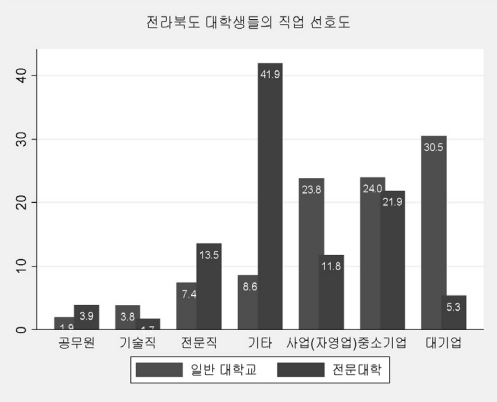
전라북도 중소기업 인원 부족률 현황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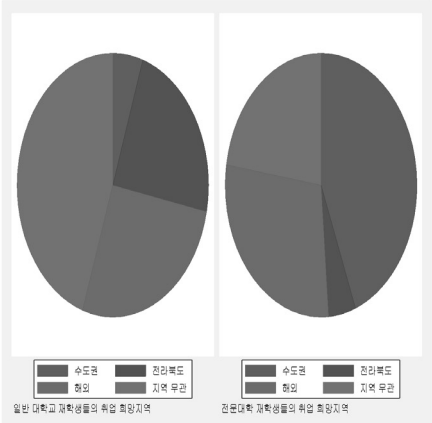
대학생 직업선호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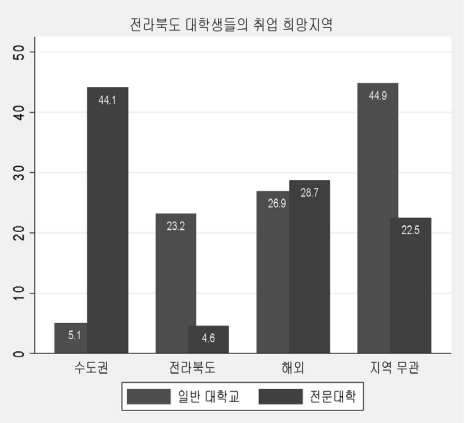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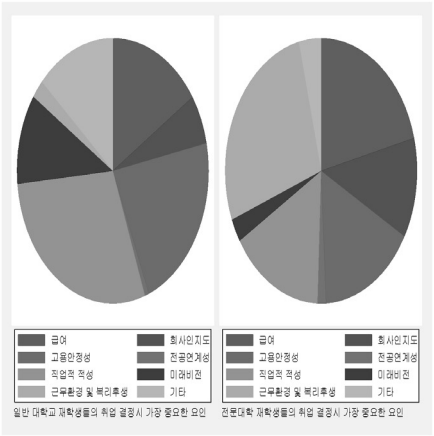
대학생 직업선호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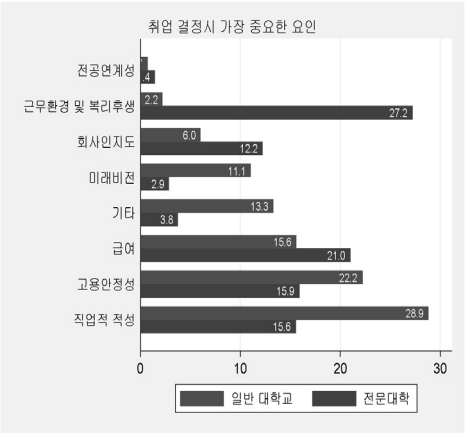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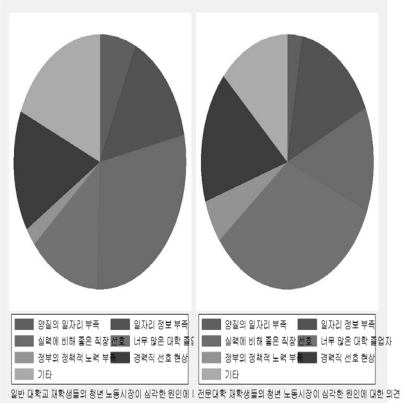
대학생 직업선호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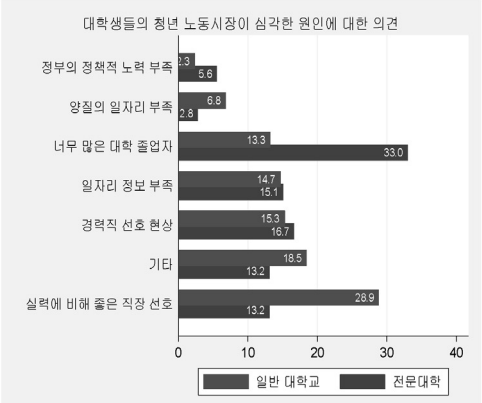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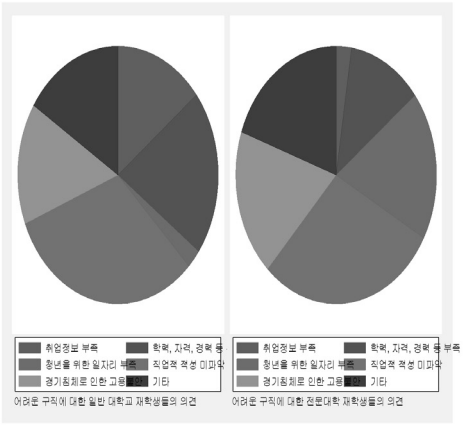
대학생 직업선호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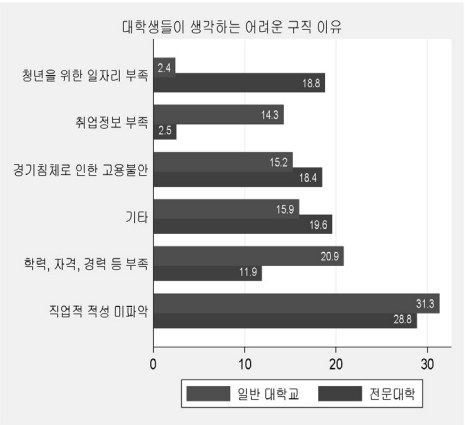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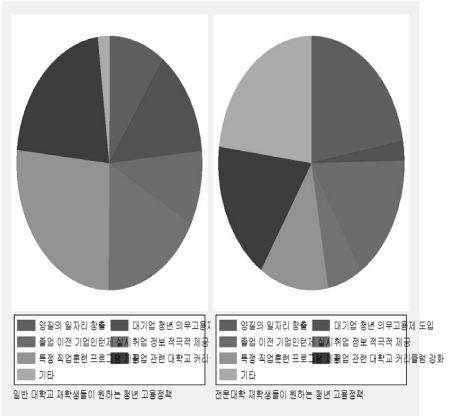
대학생 직업선호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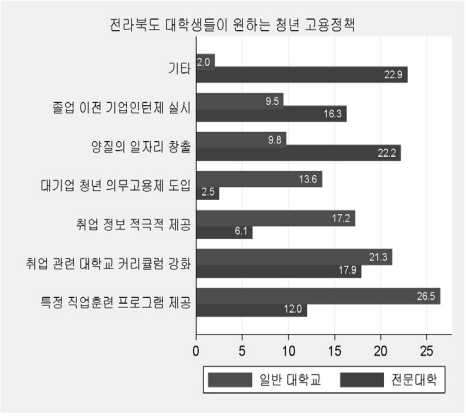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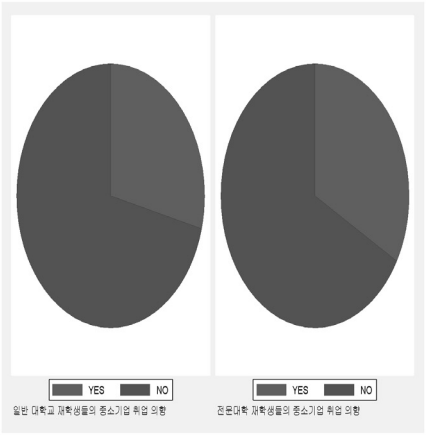
대학생 직업선호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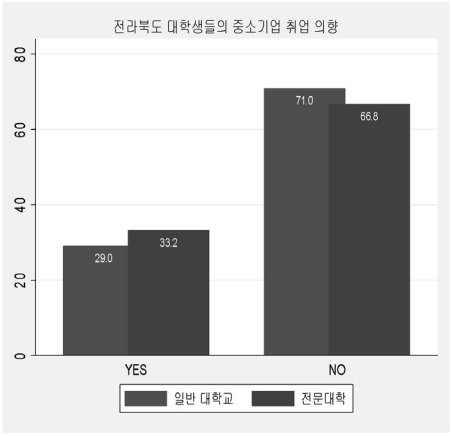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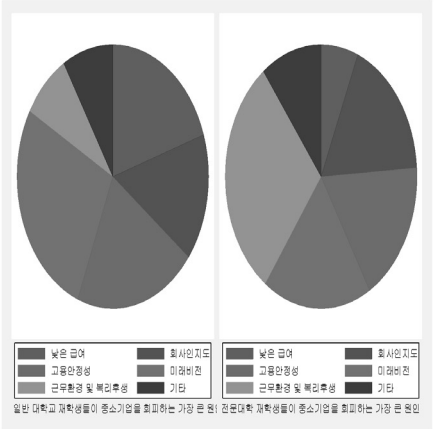
대학생 직업선호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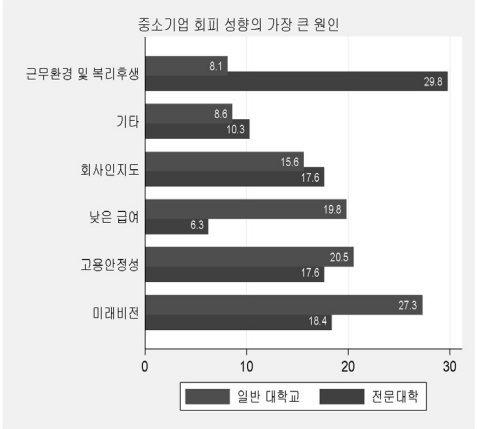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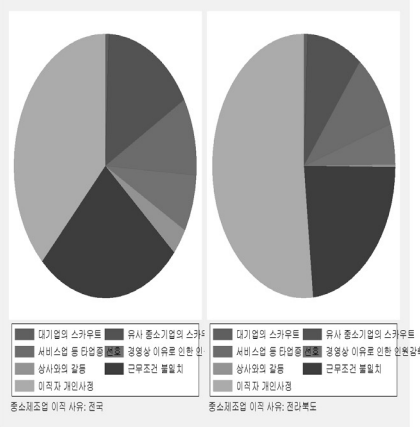
대학생 직업선호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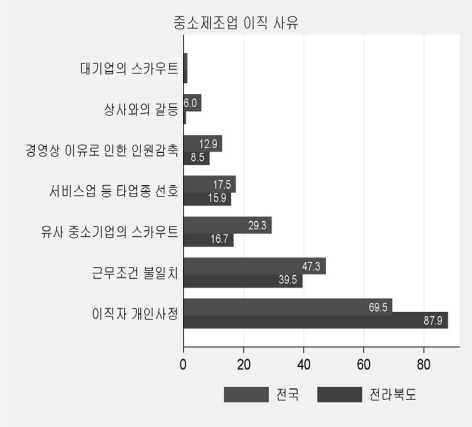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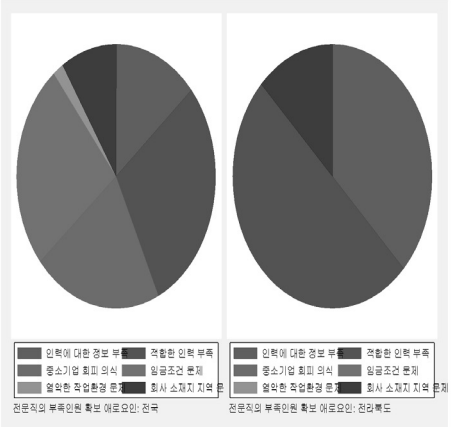
중소기업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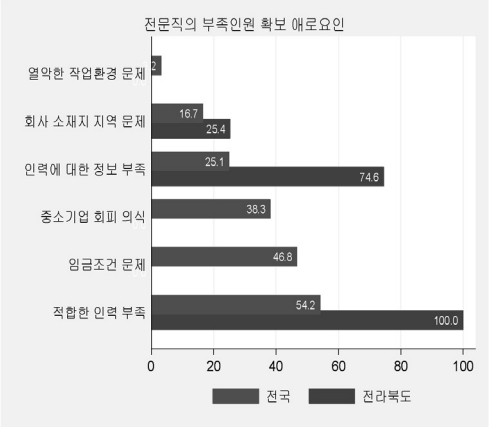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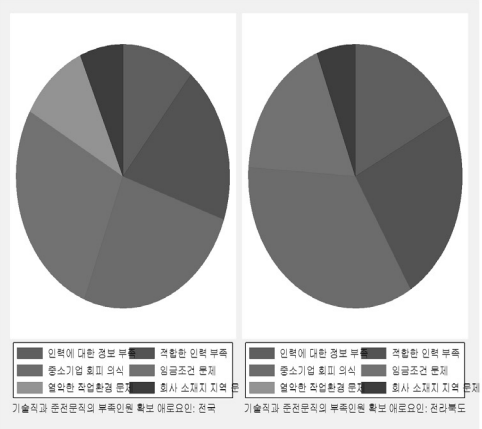
중소기업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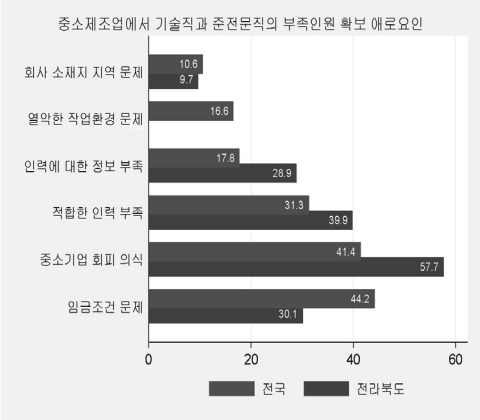




↦ 32

중소기업 설문조사





↦ 33

2. 전라북도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

- 적합한 인력 육성 측면에서의 청년 실업 해결방안
- 중소기업 역량 강화 측면에서의 청년 실업 해결방안

↦ 34

적합한 인력 육성 측면에서의 청년 실업 해결방안

- 학교 교육과 직업 훈련의 연계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특정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설립
- 기업인턴제를 통한 직업적 경험 획득 통로 마련
- 전라북도 공공 취업정보 기관 운영

↦ 35

학교 교육과 직업 훈련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노동력을 공급하는 학교 교육과 산업에서 요구되는 인력이 적절하게 매치되고 있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 커리큘럼 자체에서 직업훈련적 성격의 교과과정을 마련하도록 학교측에 인센티브 제공하여 학교 스스로

- 대학의 기존 커리큘럼 외에 특정 직업 관련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졸업요건으로서 현실적인 직업 능력 개발 관련 커리큘럼의 일정 과목 수강 및 현장 실습 의무화 제도 마련
- 외부 기관의 직업 훈련에 대한 학점 인정 제도 마련

↦ 36

특정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대학연계 직업훈련기관 설립

도내 대학생들을 위해 특정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연계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하여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적 적성을 찾고, 또한 대학교육 이외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직업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37

기업인턴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직업적 경험 획득 통로 마련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부족한 직업 경험으로 인해 취업 이전 직업적 적성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학중의 직업훈련이나 관련 과목 수강 이외에 실질적인 직업 경험을 쌓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부 지원을 받는 도내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청년 기업 intern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다양한 직업적 경험 획득 통로를 제공함

↦ 38

전라북도 공공 인력 및 취업 정보 기관 운영

도내의 인력을 공급하는 청년들과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전라북도 공공 인력 및 취업 정보기관을 운영하여 청년들은 도내 기업의 고용이나 취업과 관련한 정보와 함께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업 역시 적합한 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39

중소기업 역량 강화 측면에서의 실업 해결방안

- 고부가가치 창업 유도 및 우량 중소기업 지원제도
- 기업혁신형 창업 유도를 위한 지원 마련
-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인센티브 제공

↦ 40

고부가가치 창업 유도 및 우량 중소기업 지원제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생계형 창업보다 고부가가치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여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

- 대기업 은퇴자나 연구원 출신 인력들에게 창업 자금이나 기업 운용비용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창업을 유도
- 도내 우량 중소 기업을 지정하여 기술적인 지원이나 금전적인 지원 실시
- 우량 기업의 인적 자원 지원을 위해 도내의 관련 전문가 클럽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이 필요한 과학 기술이나 경영 관련 자문을 실시

↦ 41

기술혁신형 창업 유도를 위한 지원 마련 I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혁신형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 기술 혁신형 창업과 관련된 정보와 기술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라북도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도입함
- 기술 혁신형 창업을 시도하려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관련 전문가 집단이 평가하여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창업 지원자에게 Seed Money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무료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함

↦ 42

기술혁신형 창업 유도를 위한 지원 마련 II

- 기술 혁신형 창업을 위한 전라북도 투자 중개기관을 설립하여 도내의 벤처 창업 지원자와 투자자를 연결시켜주고 투자자들에게 정부 보증제도를 실시하여 원활한 자금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유도함

- 창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지방 정부 차원의 온라인 창업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창업 절차 상담 서비스도 개설하여 성공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함

↦ 43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근속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불투명한 미래 비전과 고용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회피 성향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써 중소기업 취업 장기 근속 인센티브 제공

- 도내의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 자금이나 운용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숙련 노동자에게 미래 전망과 관련된 내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청년 계층의 중소기업 회피 현상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44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인센티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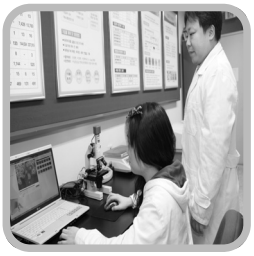
중소기업 회피 성향을 줄이기 위한 두번째 노력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인적 자원 개발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보상하기 위해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정부가 인적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함
- 전라북도 통합 인적 자원 개발 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업의 협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기업을 인력 육성형 기업으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이나 포상금 지급과 같은 기업 지원제도를 함께 실시함

↦ 45

감사합니다

↦ 46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기회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4

이 민 수 (전북발전연구원)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기회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Ⅰ. 서론

농촌 노동시장은 도시 노동시장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박성재 외, 2007; 이영대·정명채, 1990; 이용헌, 1991; 이민수 & 박덕병, 2006; Green & Hardill, 2003; Errington, A. 1998; Vidal, C. 2001; Kinsella, J. et al. 2000; Benjamin, C. 1994)

- 경제활동참여율이 도시에 비해 낮음, 특히 여성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노동인구의 연령이 도시에 비해 높음
- 실업률이 도시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계량화하기 어려운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이 존재
- 파트타임과 계절적인 일시적 고용이 많음
- 상대적으로 복합취업(pluriactivity)의 비율이 높음
- 농촌지역은 자가고용(self employment)의 비율이 높음
-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혁신적이고 유능한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선진국의 경우 역도시화 현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민이 도시근교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지닌 도시근교로 옮겨가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 근교 농촌지역은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가 다수 창출됨
- 국내의 경우는 도시근교 농촌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 인력들의 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농촌의 생활서비스분야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냄
- 농촌고용을 위해 유치되는 기업은 대부분 저임금에 기반하여 경쟁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농촌 노동력은 숙련된 훈련을 받을 기회가 사전적으로 차단됨
- 많은 농촌지역은 기본적인 서비스와 인프라의 부족으로 기업창업활동에 불리함
- 최근 농촌지역은 농촌관광, 체험, 사회서비스 등에서 새로운 고용기회가 생겨나고 있으며, 특히 농촌관광은 타 활동에 비해 지역경제승수효과가 높음

도시와 차별화된 특성을 기반으로 농촌고용 현황이 분석되어야 농촌지역에 적합한 고용창출 정책 수립이 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촌을 정확히 정의하고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와 농촌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읍/면과 동으로 구분
- 농촌지역을 구분하는 데는 현재 일치된 기준이 없음. 본 연구는 농촌지역을 엄밀히 구분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으므로, 전북 농촌을 동부권지역(무주, 장수, 진안, 임실, 순창, 남원)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

Ⅱ. 농촌지역과 일자리 창출

1. 농업(농식품)의 고용유발 효과[1)]

1) 취업유발계수

2007년 전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2)]는 13.9명으로, 그 중 농림어업이 46.8명으로 투자대비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큼

- 서비스업 18.1명, 건설업 16.8명, 광업 10.3명, 제조업 9.2명, 전력·가스·수도 3.5명 순
- 서비스업: 음식 및 숙박업이 36.5명, 도소매업이 29.5명 순
- 제조업: 음식료품이 23.0명, 인쇄 및 복제업이 19.4명 순

농림수산식품분야 취업유발계수는 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는 추세임

- 농림어업: '00년 62.9명 → '05년 51.1 → '07년 46.8
- 음식료품제조: '00년 32.3명 → '05년 24.7 → '07년 23.0
- 음식·숙박업: '00년 43.0명 → '05년 37.8 → '07년 36.5
- 전산업: '00년 18.1명 → '05년 14.7명 → '07년 13.9명

이 같은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농식품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빠르며, 투자액 대비 고용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줌

2) 전후방 관련산업 및 서비스 부문 고용

농림어업 생산(1차산업)과 전방의 식품제조업 및 기타 제조업(2차산업) 고용은 감소추세이지만, 후방의 농자재산업과 특히 전방 관련서비스부문 고용은 증가추세로, 농식품부문의 일자리창출에서 농자재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1)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2)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표> 농림어업 부문별 고용자수

단위: 천 명

구 분	2000	2008
농림어업(생산, 1차산업)	2,243	1,686
생산서비스부문	33	41
전방관련 가공·제조업(식품제외)(2차)	149	143
식품제조업(2차)	225	217
농자재부문(2차)	110	169
후방관련 서비스부문	24	23
전방관련 서비스부문	1,938	2,077
계	4,723	4,356

자료: 농촌경제연구원(2009)

- 후방관련 서비스: 농림수산업 투입재(비료, 농약, 농기계, 하천사방, 선박 등)의 물류 및 도소매업, 생산 및 경영지원 컨설팅 및 R&D, 인력지원 및 농지거래서비스, 재해보험 등
- 전방관련 서비스: 농림수산업 산출물의 물류 및 도소매업, 검역 등
  - 식품관련 전후방관련 서비스: 물류 및 도소매업, 검역, 음식점, 외식업 등

2. 일자리 창출에서의 농촌지역의 새로운 가능성 – 선진국 사례

최근 유럽지역의 고용추세를 보면, 새로운 고용기회는 1980년 이후로는 농촌성(rurality)이나 도시화(urbanization)의 정도와는 연관되어 있지 않음(OECD, 1996). 중간지대 농촌지역과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산업고용에서 증가를 보여주었음. EU의 경우 1980년에서 1993년까지 농촌지역에서는 서비스 부문에서 0.8% 증가하였으며, 많은 국가에서 고용 증가율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Terluinida, 2001).

농촌지역의 인구성장은 농업부문에서의 고용추세는 감소한 반면에 주로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기회 증가에 의해 설명됨. EU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community services)가 농촌지역의 선도적인 고용창출 분야로, 농촌고용의 4분의 1이상을 차지. 다음으로는 제조업(25% 이하), 기타 서비스(호텔, 식당 등)가 20%, 건축이나 개인 사업이 9% 정도를 차지(Terluinida, 2001).

농촌지역에 새로운 대두되는 고용분야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음(Copus, A. et al., 2006).

- 농촌관광(agro-tourism)
- 재생에너지
- 문화
- 자연/경관관리
- 고품질농산물/유기농산물
- 정보기술서비스

- 공공 서비스(보건, 사회서비스 등)

1) 농촌관광

농촌관광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농촌지역의 개발에 가장 큰 승수효과를 가져옴(European Commission 1999). 승수효과로 인해 농촌관광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수요는 농촌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간접적인 효과를 유도(Archer 1982; Vaughan, Farr and Slee 2000). 특히 전통적으로 농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농산물 부문은 농촌관광개발에 의해 가장 많은 간접적 영향을 받음(Fleischer and Tchetchik 2005).

EU지역에서 농촌관광으로 인한 농가소득 영향을 보면, 국가에 따라 다양한 결과(Agra informa, 2005)

- 동유럽의 신규 가입국들은 거의 변화가 없이 정체
-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농촌관광활동을 통해 고용과 농가소득이 의미있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는 매년 약 3%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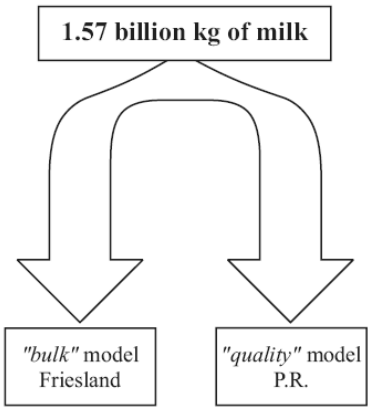
2) 고품질 유기농산물

유럽의 사례 연구에 의하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방식은 상업화된 대규모 농업에 비해 훨씬 많은 고용을 창출. 이탈리아 에밀리아 지방의 'Parmigiano Reggiano 치즈' 사례에 의하면 Parmigiano Reggiano 치즈에 우유를 공급하는 낙농가는 동일한 소득을 얻으면서도 일반 낙농가에 비해 2배 이상의 고용을 창출(De Roest, 2000; De Roest & Menghi, 2000, p.445).

이탈리아의 Parmigiano Reggiano 지역과 네덜란드의 Friesland 지역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보면, 동일한 우유를 생산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는 기존의 대량 생산방식인 네덜란드 보다 우유 생산농가 단위에서 2.5배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서도 노동력 1단위당 동일한 소득을 획득.

그리고 이 같은 방식의 고품질 농업은 지역 내에서 농촌개발의 타 영역과 연결되어 훨씬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즉 고품질 농업 접근은 직접 판매, 농업관광, 농가단위 가공 등과 연결되면서 지역 내 더 많은 고용을 창출(Van der Ploeg et al.,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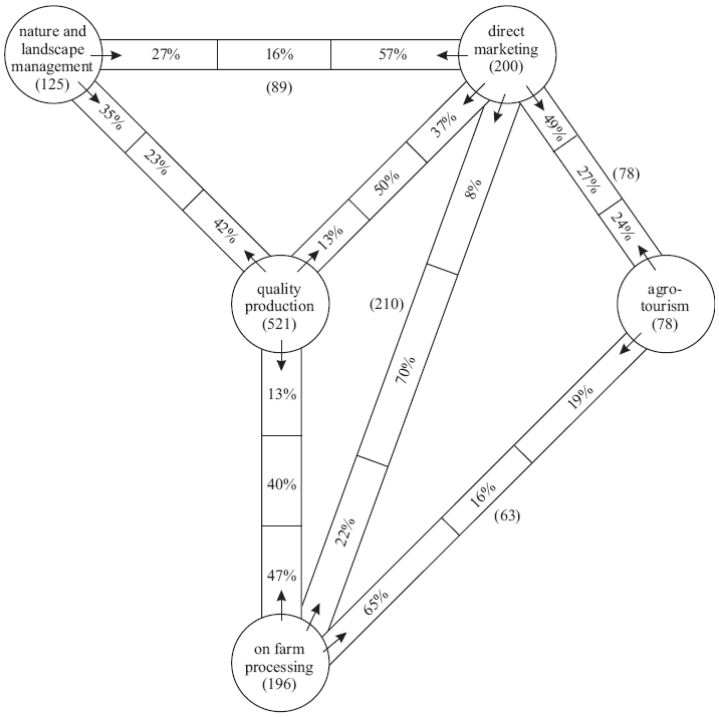
- 유럽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Oostindie, Van der Ploeg & Renting, 2002), 경관관리 농가의 42%는 고품질 농업으로 촉발되었으며, 경관관리 농가의 35%는 고품질 농업에 참여



numbers of farms	5,000	8,400
AWU/farm	1.7	2.5
total AWU	8,500	21,000
income/AWU	equal	

<그림> Friesland와 에밀리아 Romagna 지역 비교

(자료: Van der Ploeg et al., 2002, p.208)



<그림 3-1> 고품질농업의 연계효과

(자료: Oostindie et al., 2002)

3) 창업

가) 농촌이주자와 창업

- Bosworth(2006)
  - 초소규모사업체(microbusiness)의 절반은 농촌이주자가 창업
  - 농촌지역 일자리의 10%는 농촌이주자에 의한 초소규모사업체
  - 농촌이주 초소규모사업체는 평균적으로 2개의 추가적인 일자리 생산
  - 농촌이주 초소규모사업체는 지역업체에 비해 더 성장지향적
  - 농촌이주자는 폭 넓은 비즈니스 네트웍 확보, 매우 많은 가치있는 지역 관계 개발, 지역경제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 많은 공헌
  - 농촌경제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감소된 농가수입 보전, 농업관련일자리 보전

- Stockdale & Findlay(2004)
  - 자가고용 농촌이주자에 대한 연구
  - 평균 2.4 풀타임 고용 창출
  - 이주자의 약 1/4이 농촌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
  - 고용은 이주의 가장 중요한 동기

- Halfacree(1994)
  - 고용 관련 요인이 이주에 중요한 영향

- Raley & Moxey(2000)
  - 소규모사업체 보유한 농촌이주민의 40%는 새로운 사업시작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

- Keeble et al(1992)
  - 농촌 비즈니스 창업자의 66%는 이주민에 의해 창업, 지역주민은 34%

나) 농촌 창업 정책

- EU의 경우 농촌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을 농촌개발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
  - '제3차 농촌개발계획(2007~2013)'의 3대 핵심전략 중 '경제활동 다각화 및 삶의 질 향상' 전략은 농촌지역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 구체적인 과제로 농가의 비농업 부문 경제활동 겸업 촉진, 농촌지역 창업 지원, 관광 부문 활성화 등을 설정

- 영국: 농촌개발정책(2000-2006) 기간 동안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농촌사업체지원사업(Rural Enterprise Scheme)' 실시

- 투입예산: 1억 4,500만£(약 2,617억 원)
- 실적/성과
· 3,000개의 프로젝트 지원
· 1만 4,500개의 일자리 창출 또는 유지
· 1,200개의 농가 농외소득원 창출 지원
· 3,800건의 고품질 농산물 마케팅 지원
· 548개의 마을 단위 사업 자금 지원
· 3,500개의 농촌관광/수공예 창업 지원

4) 지역사회 서비스(보건, 공공서비스 등)

▪ EU 사례(Terluinida, 2001)
- 농촌지역의 고용증가는 많은 부분 공공영역의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기회 증가에 의해 설명됨. EU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community services)가 농촌지역의 선도적인 고용창출 분야로, 농촌고용의 4분의 1이상을 차지. 다음으로는 제조업(25% 이하), 기타 서비스(호텔, 식당 등)가 20%, 건축이나 개인 사업이 9% 정도를 차지(Terluinida, 2001).

▪ 캐나다 Saskatchewan 사례(Diane J. F., et al., 2006)
- 공공부문은 고용의 약 23% 차지
- 고용기회의 46%가 공공부문에서 발생
- 직접 고용 55,000명, 간접 고용 효과 21,762명
- 공공부문 종사자 직접소득 1,856백만달러, 간접소득 823백만달러
- 공공부문 종사자는 고숙련기술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이면서 중간이상의 소득 획득
- 공공부문은 특히 높은 임금 일자리가 없는 농촌 여성에게 특히 중요
-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 외에도 공공부문 종사자의 기술과 네트워크는 농촌지역에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가져옴

Ⅲ. 전북 농촌고용 현황 및 특징

1. 농업부문 현황

1) 농업부문 고용현황

▪ 2008년 현재 농어촌지역 농업경제활동인구: 1,686천명
- 2000~2008년간 농업경제활동인구는 557천명 감소(-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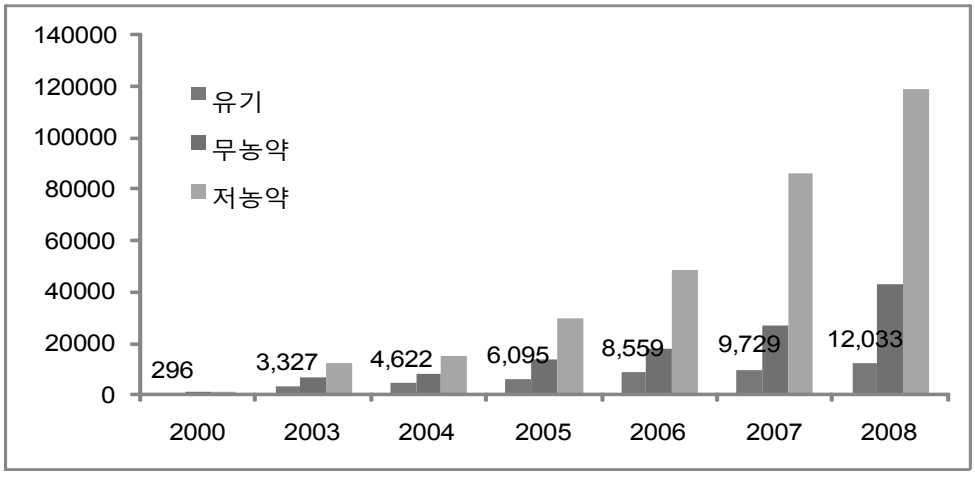
▪ 농가인구는 2008년 현재 3,187천명
- 2000~2008년간 농가인구는 년간 3-5%씩 지속적으로 감소
- 전국에 비해 전북과 동부권이 좀 더 감소
· 전국 20.9% 감소 〈 전북 25.4% 〈 동부권 28.3%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감량	증가율
경제활동인구	농업(전국)	2,243	2,148	2,069	1,950	1,825	1,815	1,785	1,726	1,686	-557	-24.8%
농가인구	전국	4,031	3,933	3,591	3,530	3,415	3,434	3,304	3,274	3,187	-844	-20.9%
	전북	389	370	334	327	316	319	307	300	290	-99	-25.4%
	동부권	113	107	97	97	94	91	85	83	81	-32	-28.3%

자료: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농식품부)

2) 고품질(친환경) 농업 현황

▪ 친환경 농업면적은 2000년 이후 높은 성장세
- 유기농의 경우 2008년 면적은 2001년에 비해 26.7배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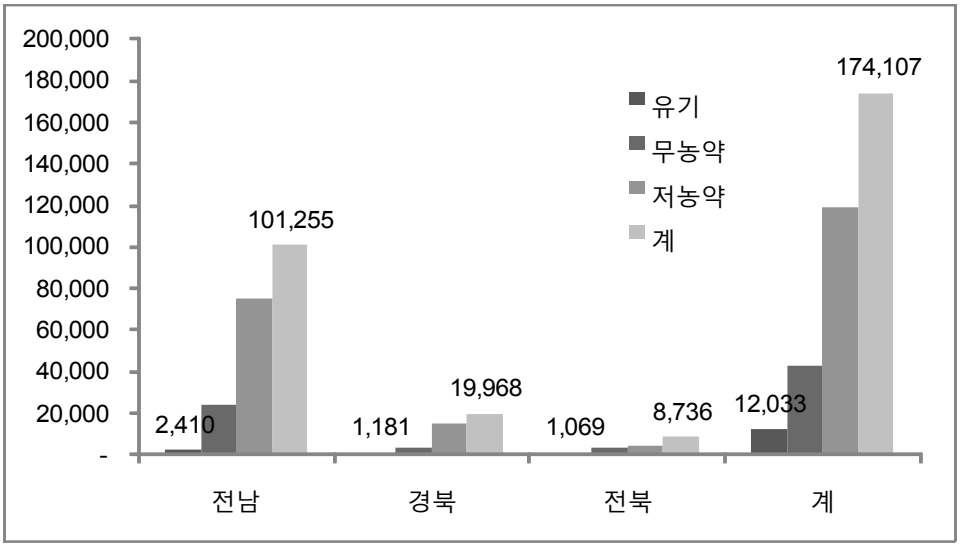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림> 친환경 면적 변화추이(ha)

▪ 지역별 친환경 농업격차 심화

- 전남이 전체의 58.2% 차지 〉 경북 11.5% 〉 경남 6.7% 〉 충남 5.3% 순
- 전북은 국내 전체면적의 5.0% 수준

▪ 전북의 경우 친환경면적은 경북에 비해 낮지만, 유기농 면적의 경우는 경북과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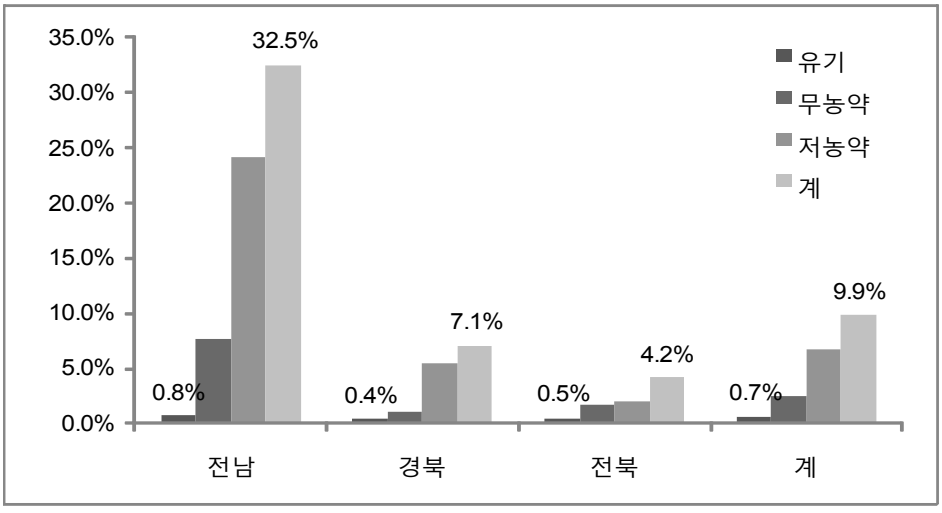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림> 지역별 친환경농업 면적(ha)

▪ 친환경 경지면적 비중도 지역별 격차가 심함

- 전남 32.5% 〉 경북 7.1 〉 경남 7.0 〉 강원 5.9 〉 전북 〉 4.2 〉 제주 4.0

▪ 유기농 면적비중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림> 지역별 친환경 경지면적 비중(%)

2. 비농업부문 현황

- 2000~2008년간 도시지역의 사업체 종사자수는 20.4%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16.8%에 비해 다소 높음
- 전북지역의 경우는 전국에 비해 10% 정도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 특히 동부권 농촌의 경우는 사업체 종사자수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사업체 종사자수의 도농간 변화 비교 (2000-2008년)

구분	전국		전북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동부권농촌
2000	11,063,783	2,540,491	337,025	133,921	39,365
2008	13,321,854	2,966,426	369,187	142,830	38,746
증감율(2000-2008)	20.4%	16.8%	9.5%	6.7%	-1.6%

자료: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

- 2000~2008년간 농촌지역의 비농업부문 종사자수는 18.2% 증가
- 전북 농촌지역의 경우는 비농업부문 종사자수는 7.0% 증가
- 동부권의 경우는 1.3% 감소

<표> 농어촌지역 비농업부문 종사자수 변화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감율
전국	2,495	2,501	2,544	2,620	2,698	2,582	2,726	2,885	2,948	18.2%
전북	132	127	129	130	131	132	135	138	141	7.0%
동부권	39	38	39	39	38	37	38	37	38	-1.3%

주: 읍·면 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정의함
자료: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

- 전국 농촌지역에서 고용이 현저하게 준 분야는 금융/보험업
- 전국 농촌지역에서 숙박/음식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용이 현저하게 증가
  - 특히 보건/사회복지분야(78.9%), 사업서비스업(62.7%)에서 현저하게 증가
- 전북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이 다소 증가했으나, 전국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음
- 전북과 동부권의 경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도소매업: 전국 0.9% 감소 < 전북 18.7% 감소 < 동부권 27.7% 감소
  - 숙박/음식업: 전국 5.0% 증가 < 전북 6.3% 감소 < 동부권 15.0% 감소
- 전북/동부권의 경우 사업지원서비스업과 보건/사회서비스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큼

- 사업지원서비스업: 전국 109.27% 증가 〈 동부권 196.1% 〈 전북 390.2%
- 보건/사회복지: 전국 81.6% 증가 〈 동부권 94.2% 〈 전북 111.2%

▪ 이 같은 현상은 상대적으로 전북과 동부권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생활서비스분야(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어 들었음을 보여줌

▪ 이와 함께 보건/사회복지에 대한 종사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
- 이는 농어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보건, 의료, 복지분야 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농어촌 복지관련 정책의 확대에 따른 서비스 공급 증가를 반영한 것임

<표> 산업대분류별 농어촌지역 비농업부문 종사자수 변화

구분	2000			2008			증감율		
	전국	전북	동부권	전국	전북	동부권	전국	전북	동부권
제조업	914,608	33,827	5,936	1,136,346	38,110	5,540	24.2%	12.7%	-6.7%
전기/수도사업	16,782	719	333	23,317	1,080	371	38.9%	50.2%	11.4%
하수/폐기물처리	15,269	505	122	21,226	819	214	39.0%	62.2%	75.4%
건설업	99,294	5,458	1,691	134,158	5,979	2,350	35.1%	9.5%	39.0%
도소매업	323,533	21,283	6,716	320,514	17,307	4,857	-0.9%	-18.7%	-27.7%
운수업	93,967	5,366	1,360	127,760	6,500	1,173	36.0%	21.1%	-13.7%
숙박/음식업	302,542	16,553	6,098	317,816	15,517	5,182	5.0%	-6.3%	-15.0%
출판/방송/정보서비스업	24,485	2,004	748	23,297	1,800	691	-4.9%	-10.2%	-7.6%
금융/보험업	76,175	5,003	1,854	59,844	4,009	1,568	-21.4%	-19.9%	-15.4%
부동산임대업	28,491	1,054	336	37,434	1,251	491	31.4%	18.7%	46.1%
전문기술서비스업	28,160	841	230	34,778	1,960	424	23.5%	133.1%	84.3%
사업지원서비스업	12,129	358	51	25,370	1,755	151	109.2%	390.2%	196.1%
공공행정	118,143	9,850	4,798	128,201	10,753	4,959	8.5%	9.2%	3.4%
교육서비스업	176,520	12,965	3,490	210,818	13,113	3,799	19.4%	1.1%	8.9%
보건/사회서비스업	73,660	4,633	1,575	133,780	9,783	3,059	81.6%	111.2%	94.2%
예술여가서비스업	42,319	1,941	748	67,231	3,062	1,034	58.9%	57.8%	38.2%
협회/기타서비스업	132,407	8,767	2,671	132,450	7,590	2,330	0.0%	-13.4%	-12.8%

주: 9차 표준산업분류코드 개정(2007년)에 기준하여 2000년 산업분류코드 재조정
자료: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

- 산업대분류에 따른 비농업부문 종사자수가 증가한 부문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종사자수 변화가 있었는 지를 파악하였음

- 전기/수도사업 분야에서는 수도사업 종사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 부문에서는 전북과 동부권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수도사업: 전국 71.6% 증가 〈 동부권 112.7% 〈 전북 128.9%

- 하수/폐기물처리 분야에서는 하수·분뇨처리업과 원료재생업 분야의 종사자수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 부문에서도 전북과 동부권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문기술서비스업의 분야에서는 전문서비스업 종사자수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북과 동부권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업과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업: 전국 3.5% 감소 〈 전북 202.9% 〈 동부권 6700.0%

- 보건/사회서비스업 분야의 경우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술여가서비스업 분야의 경우에는 창작·예술·여가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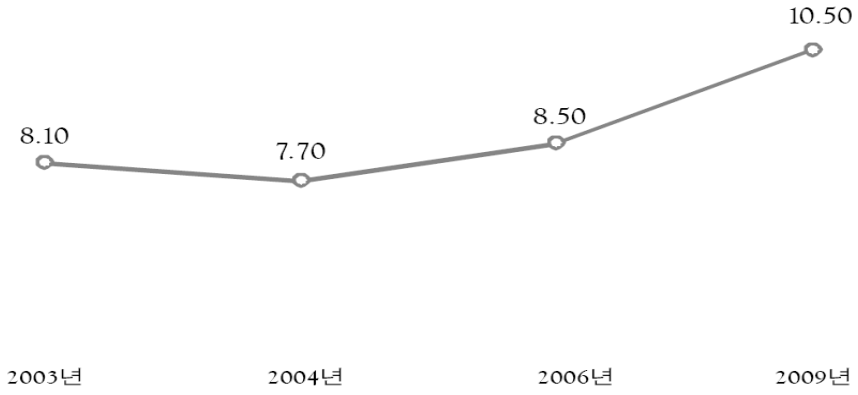
<표> 산업 중분류별 농어촌지역 비농업부문 종사자수 변화

구분		2000년			2008년			증감율(2000-2008)		
		전국	전북	동부권	전국	전북	동부권	전국	전북	동부권
전기/수도사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14464	532	270	19340	652	237	33.7%	22.6%	-12.2%
	수도사업	2318	187	63	3977	428	134	71.6%	128.9%	112.7%
하수/폐기물처리	하수,폐수및분뇨처리업	2558	122	52	3754	164	103	46.8%	34.4%	98.1%
	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	12607	382	69	17386	655	111	37.9%	71.5%	60.9%
	환경정화및복원업	104	1	1	86	0	0	-17.3%	-100.0%	-100.0%
건설업	종합건설업	32692	1827	446	41889	1619	498	28.1%	-11.4%	11.7%
	전문직별공사업	66602	3631	1245	92269	4360	1852	38.5%	20.1%	48.8%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18093	449	74	29964	754	97	65.6%	67.9%	31.1%
	임대업;부동산제외	10398	605	262	7470	497	394	-28.2%	-17.9%	50.4%
전문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10008	103	2	9654	312	136	-3.5%	202.9%	6700.0%
	전문서비스업	4206	257	58	7618	1011	94	81.1%	293.4%	62.1%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9557	200	77	14256	464	129	49.2%	132.0%	67.5%
	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4389	281	93	3250	173	65	-26.0%	-38.4%	-30.1%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2325	18	8	8281	68	27	256.2%	277.8%	237.5%
	사업지원서비스업	9804	340	43	17089	1687	124	74.3%	396.2%	188.4%

구분		2000년			2008년			증감율(2000-2008)		
		전국	전북	동부권	전국	전북	동부권	전국	전북	동부권
보건/사회서비스업	보건업	46889	3248	1206	69513	4873	1486	48.3%	50.0%	23.2%
	사회복지서비스업	26771	1385	369	64267	4910	1573	140.1%	254.5%	326.3%
예술여가서비스업	창작,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078	448	285	10341	831	436	153.6%	85.5%	53.0%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38241	1493	463	56890	2231	598	48.8%	49.4%	29.2%

3. 농촌관광 현황

- 2000년 이후 정부는 경제적으로 침체된 농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관광 육성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
- 이에 따라 현재 정부의 지원과 투자를 기반으로 한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에서 주요 경제활동의 하나가 되고 있음
- 현재 농촌관광을 통해 상당히 많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창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는 없는 상태
- 농촌진흥청이 격년제로 실시한 대도시 도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농촌관광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쾌적한 환경 등과 같은 어메니티와 문화체험을 즐기기 위하여 농촌관광을 하는 도시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03년 8.1%, 2004년 7.7%, 2006년 8.5%, 2009년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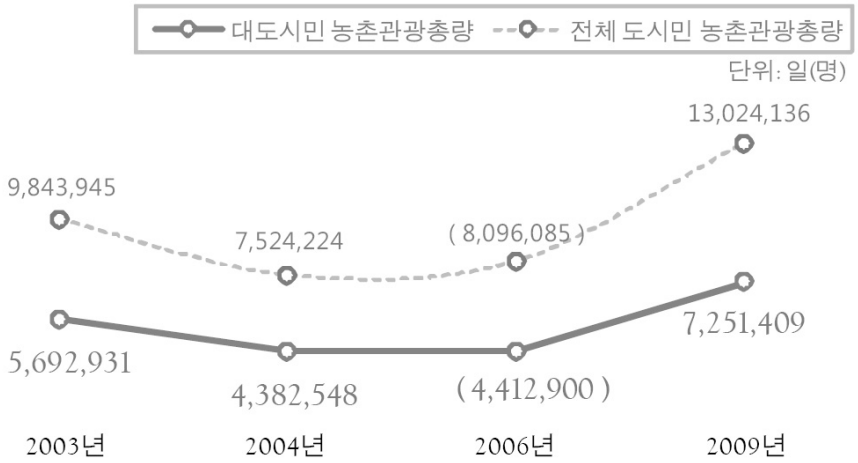


주: 농촌관광경험률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농촌관광을 한 경우
자료: 농촌관광실태조사(농촌진흥청)

<그림> 농촌관광 경험율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2009년 현재 지난 1년간 농촌관광을 경험한 도시민은 약 187만명

- 이들의 대도시민 농촌관광 총량은 연인원 725만명(경험자수 × 경험회수 × 체류일수)
- 전체 도시민 농촌관광총량은 연인원 1,302만명으로 추정됨



농촌관광				
경험횟수	2,442,284회(명)	2,511,737회(명)	(2,529,132회(명))	4,008,764회(명)
경험자수	1,384,534명	1,333,819명	1,482,595명	1,870,757명

주: 2006년에는 경험일수, 체류일수가 조사되지 않아 2004년 기준으로 총량 추정
자료: 농촌관광실태(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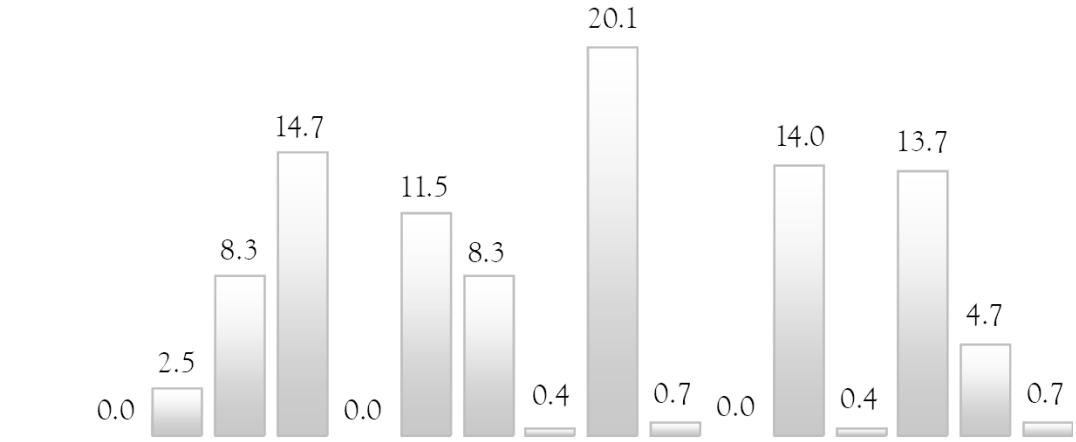
<그림> 농촌관광총량

▪ 농촌관광객의 전북지역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6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2006년(9.4%)에 비해 약 4.7% 감소

▪ 농촌관광점유율은 경북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경남, 충남, 충북이 소폭 상승하였음

- 경북의 경우 경북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경북이 다양한 판촉활동을 수행하였기 때문

▪ 전북의 경우도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숙박시설 육성과 함께 지역차원의 홍보전략이 필요함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2006	0.0	0.0	12.9	24.7	0.0	7.1	4.7	0.0	8.2	0.0	0.0	11.8	0.0	14.1	9.4	0.0
2004	0.0	1.0	26.3	13.1	1.0	10.1	4.0	2.0	13.1	0.0	0.0	10.1	0.0	10.1	6.1	3.0
2003	0.5	1.5	17.2	13.1	2.0	5.4	6.4	3.0	11.8	0.0	2.5	12.3	0.0	10.8	1.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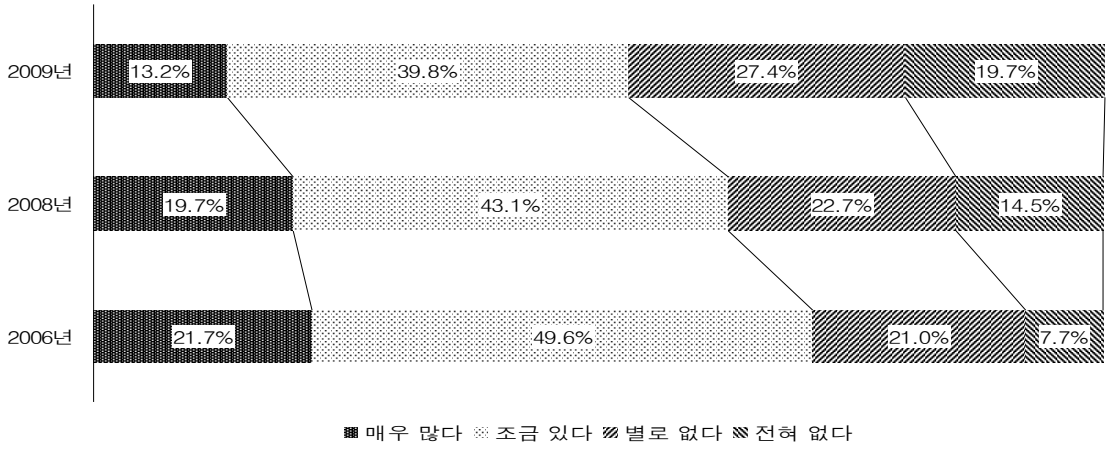
자료: 농촌관광실태(농촌진흥청)

<그림> 지역별 농촌관광 점유율

4. 귀농귀촌 현황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최근의 사회현상을 농어촌지역 노동력 공급과 지역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09년 현재 전체 도시민 중 귀농·귀촌 의향자의 비율은 5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전체 도시민 중 구체적인 귀농·귀촌 준비를 시작한 비율은 약 12%



<그림> 도시민의 귀농 의향

▪ 귀농은 경기위기와 밀접하게 관련

- 귀농 농가 수는 IMF 직후 연 6천여 가구 이상 급증하다가 경기가 회복되는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07~2008년 전체 귀농 가구 중 전북도의 비중은 약 18.5% 차지

<표> 연도별 귀농현황

구 분	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전국	23,113	6,409	4,118	1,15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전북	3,116	791	456	166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	(13.5)	(12.3)	(11.1)	(14.4)	(14.4)	(11.7)	(16.4)	(12.7)	(5.9)	(14.3)	(19.6)	(17.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2009), 내부자료.

▪ 귀농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표 3-4), 전체적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나, 2003년 이후 40대와 50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귀농자들의 귀농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이와 함께 60대 이상의 귀농자의 구성비율도 점차 증가

<표> 연도별 귀농인구의 연령별 분포

구분	계(%)	'90~'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30,299 (100%)	7,186	6,409	4,118	1,15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29이하	2,105 (6.9)	473	809	361	65	38	62	64	34	54	70	44	31
30~39	11,022 (36.4)	2,836	3,222	2,077	515	316	258	239	243	287	315	386	328
40~49	8,581 (28.3)	1,824	1,544	1,206	391	293	238	260	402	393	565	766	699
50~59	5,679 (18.7)	1,345	659	422	155	187	149	201	423	319	481	706	632
60이상	2,912 (9.6)	708	175	52	28	46	62	121	200	187	323	482	52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2009년), 내부자료.

5. 전북 농촌지역 고용현황 시사점

- 고품질 농업 기반이 중요
  - 직접적 일자리 다수 창출
  - 이와 연계된 다양한 혁신적 일자리(신유통), 공공적일자리 창출

- 지역고용승수 효과가 가장 큰 농촌관광 육성

- 창업지원 체계화
  - 고용없는 성장시대에는 농촌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남
  - 농업외 고용이 더 큰 폭으로 성장
  -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 이들을 지역 인적자원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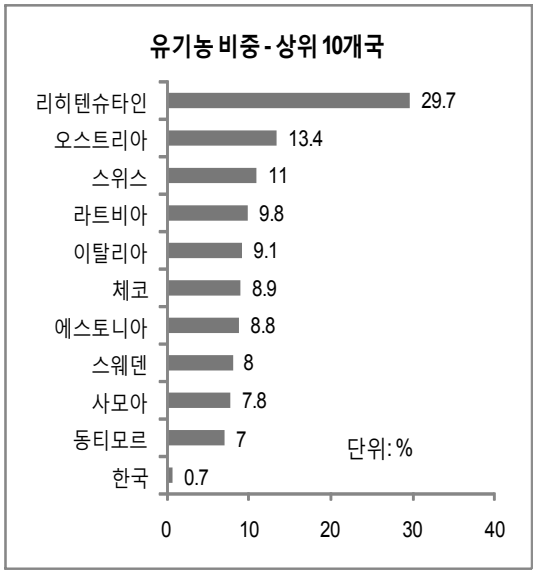
- 보건/복지/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증대
  - 농촌지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
  - 외국사례를 보면 농촌지역이 과소화되면 장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 일자리
  - 지역내 자생력을 가질수 있는 농촌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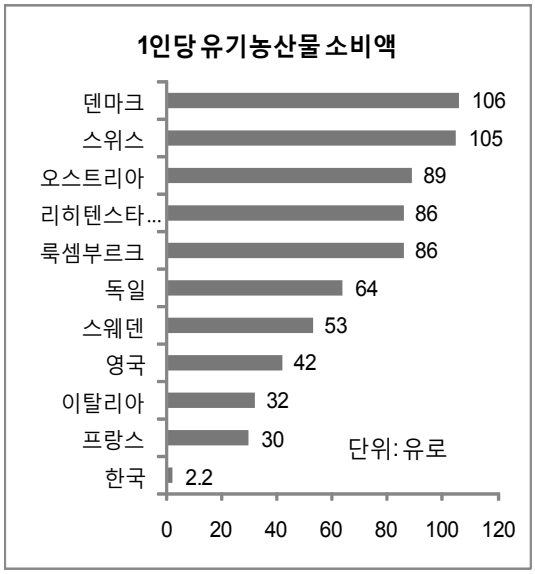
- 공공부문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재조직화
  - 농촌지역에서 가장 양질의 직장인 공공부문의 지역내 역할 미비
  - 지역내 공무원의 거주여부가 생활서비스 일자리 유지에 매우 중요
  - 외국사례를 보면 공공부문 종사자의 지역내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

Ⅳ. 전북 농촌고용창출 기본 방향

1. 전략1: 전북농업을 고품질농업(유기농)으로 전환

- 국내외 사례를 보면 유기농 소비시장은 매우 높은 성장세, 특히 국내의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 유기농 소비비율이 낮아 향후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유기농 공급과 수요 불일치 문제
  - 소비가 확대되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초과공급문제 발생 ➔ 가격프리미엄 불가능
  -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가격 차 감소
  - 유기농산물을 일반농산물로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
- 유기농업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성장(개발) 고려한 공급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 IFOAM(20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 유럽의 ORGAP와 같이 전북 차원의 유기농 실행계획 프로젝트 실시

<유럽의 ORGAP(organic action plan) 프로젝트 사례>

· 2001: 유럽의회 스탭의 실행계획 제안
· 2002: 실무연구그룹-> 실행계획, 평가/모니터링 시스템 제안
· 2003: 제안서검토(유럽의회,이해관계자)/수정/확정
· 2014~: 예산실행, 메뉴얼개발(농민, 평가, 모니터링 팀)

▪ 산지간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북 유기농 브랜드 육성을 위한 프로제트 실행

<계획사례: 전라북도 동부권 유기농밸리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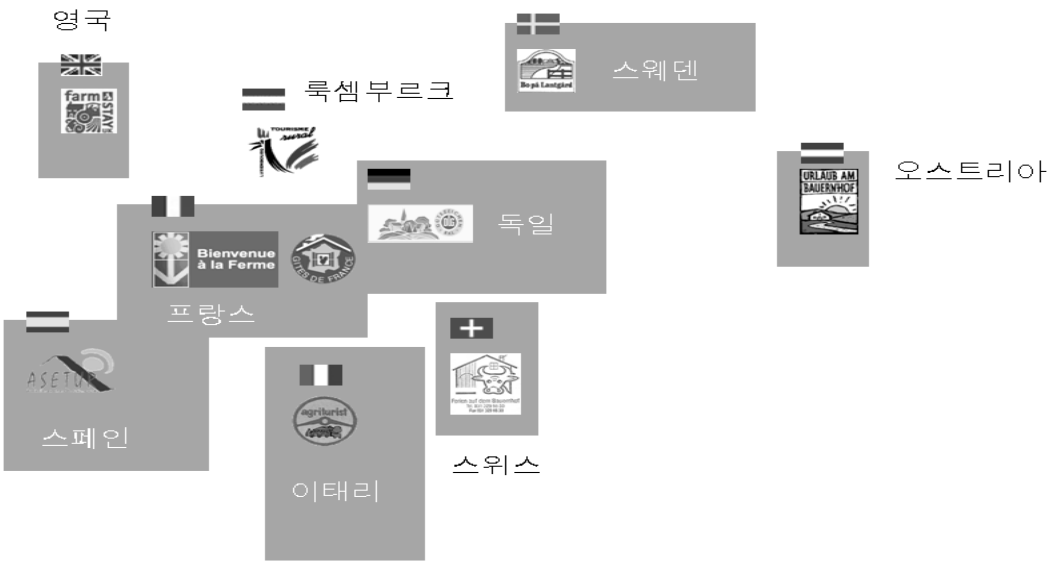
- 수입 유기농산물 시장개방 및 산지간 친환경농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촌관광과 연계한 차별화된 '유기농 전북'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전북의 농업을 유기농으로 단기간내에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에 대한 지역내 농가와 소비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그램이 필요
- 전북 동부권을 중심으로 골짜기 농업을 고품질 유기농 식품 단지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전략2: 전북 농촌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상품화(전북지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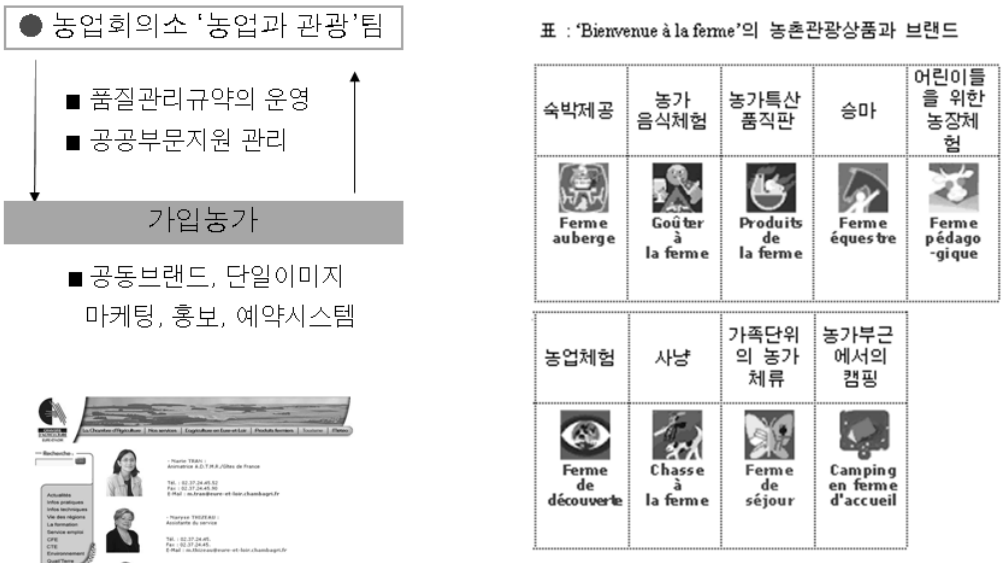
▪ 2009년 현재 전북의 농촌관광 점유율은 4.7%로 2006년에 비해 약 5% 가까이 하락
  - 이에 비해 경쟁 지역인 경북, 경남, 충남은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 프랑스의 지뜨와 같은 전북지역의 네트워크화된 농촌관광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
  - 전북지뜨의 등급화 브랜드화 전략 개발

▪ 전북지뜨를 인증, 관리할 전담 행정조직 신설



<그림> 네트워크화된 서유럽 농촌관광



<그림 > 프랑스의 농촌관광 상품, 브랜드관리 체계

3. 전략3: 창업지원체계 구축

- 취업유발계수가 큰 농림어업부문의 선도 농어업인·기업, 귀농·귀어 창업 농어업인·기업 지원 확대
  - 농촌지역 주민의 경우 창업시 법률적/기술적 문제에 대해 도시지역보다 더 큰 애로점을 호소 ⟶ 창중소규모 창업에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하여 농촌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취업애로층, 여성농업인, 미취업자의 지역기업·서비스산업 취업 교육, 알선, 보육지원 등 적극 지원

◦ 현재 농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창업지원은 여러 기관에서 추진됨에 따라 중복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중앙부처(교과부, 농식품부, 농촌공사), 전북도(농업기술원, 인력개발원, 생물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지자체(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컨설팅회사의 참여

◦ 농촌창업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도차원의 조정기능 활성화, 창업기관들간의 협의체계 구축, 역할분담체계 구축 등 도차원의 농촌창업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
- 유럽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촌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프로그램, 가이드 북, 교육프로그램 평가 등 창업교육지원시스템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농촌지역 2010년 일자리 창출 투자계획 >

- 미국은 농림부와 중소기업청이 협력하에 농촌지역 창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존 5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한 160여개 사업장 이외에 추가로 9억 달러를 투자하여 300개의 신규 농업 사업장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유도
- 농촌 지역에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며, 농촌인구 3백만명을 기준으로 보건소, 250만명 기준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이를 위해 기존에 지원된 4억 7,000만 달러에 추가로 7억 5,000만 달러 지원 (자료: USDA)

- 귀농·귀촌 인구의 적극적인 유인과 교육 강화
  - 베이비붐세대의 제2창업코스로 귀농·귀촌 유인을 위한 적극적인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시행
    * 향후 10년간 712만명 베이비붐세대의 2%(14만명)가 농촌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
      전북은 이중 20% 유입(2만8천명)을 목표로 전략 수립

- 현재 중앙정부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정책은 후계농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농업부문 창업을 유도에 초점

- 귀농귀촌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초로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 및 행사 진행, 시제품 제작,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지원분야 및 예시(5개 분야)

· **농업 분야** : 농특산물 신상품 및 적용사례 개발,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행사 진행, 직거래 모임 설립 및 유통망 구축, 유기농 교육농장 운영 등

- **교육 분야** : 산촌유학 학습 및 예비 프로그램 진행, 지역농업 교과서 개발, 학교내 학습용 텃밭 운영, 학교급식 개선방안 검토, 방과후 공부방 운영, 소외지역 찾아가는 교육 등
- **문화 분야** : 청소년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소외지역 영화 등 서비스 제공 행사, 각종 공공미술 프로그램 운영, 전통 공예품 제작, 지역자원 발굴 조사 및 DB 구축 등
- **복지 분야** : 스포츠맛사지, 호스피스 활동, 노인 이미용 서비스 제공, 앞마당 및 공공시설 조경 서비스,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 진행, 노인 한글 지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 **기타 분야** : 생태건축 연구 및 시범사업 진행, 지역화폐 연구 및 시범사업 진행, 펜션/카페/찻집 등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마을신문 매뉴얼 제작 등

4. 전략4: 농촌형 사회적기업 육성(로컬푸드, CB, 마을기업)

- 완주군/진안군 모델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
  - 전북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모법이 되는 완주군과 진안군의 사회적기업 육성 모델이 있음
  - 이 두개 시군의 경험이 공유되도록 지원하고, 시군간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창원의 협의체 구성

- 노인복지, 지역개발 거버넌스, 녹색성장, 환경관리, 로컬푸드, 보건복지, 평생학습, 준공공 교통 등 농어촌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서비스를 공급함과 동시에 고용 창출

- 특히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고학력, 경영마인드의 귀농·귀촌 인력(베이비붐세대)을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

- 시도 포괄보조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등 지역커뮤니티지원사업 체계화
  - 정책위상 정립, 카테고리화, 사업관리, 모니터링/성과 관리 체계화

- 지역제품 소비 조달전략 수립: 예산분석-〉 사회적기업과 연계되는 지원사업 도출

<노동부의 기업인증과 차별화된 사업(project) 인증방식으로 지원>

- 사업인증방식 : i)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미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사업' 제안 자격 부여
  ii) 제안 '사업'을 심사하여 해당사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
- 사업인증방식은 인건비지원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기존 보조금 사업을 농어촌지역내 사회적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창원사례: 초등학교 부식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된장을 일반 구매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급식 품질 향상)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분야 및 예시(4개 분야)
  - **농식품 지원서비스형** : 공동농기계사업단(사례: 장수), 로컬푸드(사례: 장수), 친환경농자재(사례: 흙살림), 급식(진안 나눔푸두), 고품질농산물가공/유통
  - **도농교류형** : 농촌관광(진안), 귀농귀촌지원(진안), 1사1촌, 산촌유학(완주)
  - **농어촌환경보전형** : 지역에너지(바이오매스, 유채; 부안), 리사이클링(폐기물재활용; 임실), 지역환경·경관보전(숲가꾸기, 에코투어리즘, 유휴농지활용, 다랭이논 보전)
  - **농어촌 사회서비스형** : 교육/평생학습, 보건의료, 취약계층 돌봄, 청소년/아동 활동지

5. 전략5: 공공부문 일자리 재조직화

▪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재조직화(나누기)를 통한 고용확대

▪ 현재 많은 공무원이 근거지는 주변 도시지역 --〉 지역생활서비스 분야 일자리 감소 --〉 지역쇠퇴의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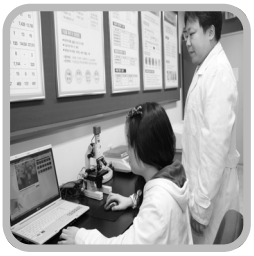
* 롯데리아가 있는 군지역 특징(서천, 함양 등): 대부분의 공무원이 지역에 거주

▪ 군단위 행정일자리 나누기

- 행정 공무원은퇴한 후 남는 TO를 풀타임이 아닌 2명 이상의 파타임, 혹은 유연근무제(3일 근무) 공무원 채용
- 안정적 일자리 확보될 경우 우수한 귀농자 유치 가능

▪ 행정선진화와 연계

- 유연근무제, 파타임(비전임) 행정공무원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업무명세화가 필요
- 경성적 정책사업(하드웨어사업)은 예산 집행이 사업 성과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정책사업 과정에 크게 관여할 필요 없이 행정서류 작업만으로 사업의 집행이 가능. 그러나 네트워크와 주민역량강화를 중시하는 연성적(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의 사업에서는 이전과 달리 공무원이 주민과의 접촉을 통한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그러나 현재 공무원 조직은 연성적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순환보직, 조직의 경직성 등)가 있음
- 외국의 경우도 이 같은 한계를 경험하고 연성적 정책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무원 조직을 반관반민 조직으로 개편 함
- 현재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업이 연성적 사업임.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업은 진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행정기구 내에서 일정기간 인큐베이팅을 거쳐 독립시키는 행정업무 재조정이 필요







종 합 토 론

좌　　장: 최 원 규 (교수,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정토론: 임 상 훈 (기자, 전북일보)
최 낙 관 (교수, 예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최 창 곤 (교수, 전북대학교)
구 자 인 (팀장, 진안군청 귀농귀촌지원센터)
최 상 기 (과장, 전북도청 일자리창출과)

_ 메모 _

_ 메모 _

_ 메모 _